



박근혜 2기 내각의 경제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도 못 된다

▶ 관련 기사 14~1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오늘날 계급투쟁과
급진좌파 그리고 혁명가들

▶ 9~12 면

세월호 참사
세월호 유족 인터뷰

▶ 3, 20 면

논쟁

박태주와
이범의 입장 비판

▶ 8 면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 번역 출간

아나키스트에서
볼셰비크로

▶ 16~17 면

7·30 평택 재선거

김득중 노동자
후보 인터뷰

▶ 6 면

건설, 병원, 철도, 케이블
노동자 투쟁

▶ 4, 5, 7, 20 면

누구의 말일까요?

“자녀를 둔 팔레스타인 어머니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뱀을 기르는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많은 뱀들이 생겨날 것이다.”

뱀만도 못한 이스라엘 여성 국회의원

“혐오 물품이고 미풍양속을 해쳐서 안 된다.”

광화문에서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기리는 관을 들고 행진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

“어떤 의원이 저희를 닭에 비유했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꼭 다시 온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세월호 유가족의 절절한 다짐

“정부와 해경에 불만을 갖게 했다.”
방송소위원회 심의의원 함귀용, JTBC의 다이빙벨 보도 중장계를 주장하며

“우리가 감청 방법을 제대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수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생각하는 유병언 검거 실패 이유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사에 기록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

27기 내각에게 보내는 박근혜의 당부, 꼼꼼히 기록해 심판받으셔야죠

“혁.신.작.렬”
새누리당 재보선 슬로건, 뽀뽀작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우익 단체들이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 든 팻말, 당신들이 그러는 것도 이해할 수 없네요

“전 우주에 커피가 있는 행성은 지구뿐이라고 합니다. ... 커피가 있는 아름다운 풍경까지도 지켜주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블로그, 전 우주에서 이런 억지 논리는 처음 본다

“공사 서열 1위니까 금액이 가장 큰 낙동강 철곡보를 하겠다.”(대우건설)
“CEO의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가까운 낙동강 함안보에 관심이 있다.”(GS 건설)
“수도권에 관심이 많아 한강으로 하겠다.”(삼성물산)

4대강 공사에 담합한 대기업들, 땅따먹기 하나?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상도시장에 있는 작명소에서 지으셨다.”

주소 이전도 제 때 안 돼 투표권도 없는 나경원, 어떻게든 만들어보는 동작과의 인연

지금 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이명박의 특권 경쟁 교육 체제가 만든 교육계의 ‘큰빛이끼벌레’다. ‘교육과정 다양화’, ‘건강 이념 실현’ 같은 미사여구는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를 살리고 수자원을 개발한다는 논리와 닮았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이 토건 재벌의 이윤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위장 대운하 사업이었듯이, 자사고는 사학의 이윤을 위해 교육 평준화를 파괴한 획일적 입시 경쟁 교육이다.

자사고 운영 5년 만에 교육 생태계는 더 끔찍하게 망가졌다.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일반고로 고등학교 유형별 서열화가 뚜렷해졌다. 다양한 교육은 고사하고, 일찌감치 절망하고 배움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특목고도 ‘과학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보다 ‘대학 입시’가 자신들의 ‘특수’ 목적이 된 지 오래다. 학생의 소질보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면서 특목고는 차별을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또 다른 (대입) 특수 목적고라 할 수 있는 자사고를 대거 양산했다. 그 바람에 지난 5년 동안 고교 서열화가 더욱 심각해졌다.

실패한 자사고 정책

우리 나라 사립학교 중 재정 자립능력을 가진 곳은 거의 없다. 해방 후 초기 투자로 구별할 때만 사립일 뿐이다. 고교 평준화 이후 학생 배정, 교육 내용, 시설비, 교육운영비, 교원인건비 등 교육과정과 재정을 거의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준(準)공립이라고 한다.

자사고는 학생 배정과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대신 사학 재단이 재정을 감당한다. 이를 위해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납입금을 징수한다. 여기에 교역 방과후 학교, 체협 학습, 수학여행 등이 더해지면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연간 1천만 원에 이른



조원오 기자

체념이 지배하는 교실 고교 서열화가 심해지면서 일반고는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 지배하는 교육 공간이 됐다.

다. 민족사관고는 2천2백38만 원, 하나고는 2천1백40만 원, 현대청운고는 1천5백25만 원이다.(2012년 교과부의 ‘자사고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그러면서도 국가로부터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는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25개 자사고가 받은 국가 지원금은 2012년 55억 4천만 원(광양제철고 제외), 2013년 48억 6천만 원(민족사관고 제외)이다. 게다가 국가 지원액 중 상당액이 법률적으로 금지된 인건비와 교육운영비에 사용됐다.

또, 자사고가 성적이 우수한, 있는 집 아이들을 빨아들이면, 성적이 낮거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집 가까이 있는 자사고를 못 가고 멀리 있는 일반고로 통학한다.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하는 찼통 교실이다. 높은 실업률, 만연한 비정규직, 치열한 입시 경쟁, 복잡한 대입 제도 아래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움을 포기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이 일반고로 진학한다. 일반고는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 지배하는

교육 공간이 됐다. 교사들은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의심하며, 학부모들은 학교를 불신하는 경향이 커졌다.

자사고 교사들도 극심한 성과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학부모들은 일반고보다 3배 많은 납입금을 내기 때문에 교사임금도 3배인 줄 착각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일부 학교에서는 임금이 체불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건물을 중학교 건물로 등록해 교육청으로부터 편법 지원을 받고, 경력 있는 교사를 중학교로 전출시켜 인건비를 축소하고 있다.

여망

2013년에 국제중학교 비리가 터지자 자사고 폐지 여론도 비등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전교조를 공격하면서 자사고의 선발권을 강화했다. 전교조에 ‘노조 아남’을 통보하고 닷새 뒤에 자사고의 선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자사고 봐주기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진보 교육감 취임 전에 한

‘봐주기 평가’를 근거로 자사고를 비호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있다. 고교 입학 전형 일정에 따라 8월 13일에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 자사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일반고 전성시대’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했다. 그런데도 일부 교육감들이 5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시간이 부족하다며 특권층의 눈치를 보고 박근혜 정권과 맞서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여망을 정확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시민사회 단체는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의 이름으로 7~8월을 자사고 폐지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김성보 전교조 조합원

※ 자사고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온라인 의견 제출 <http://go9.co/vKL>

연대가 확산되고 있는 전북버스 진기승 열사 투쟁

신성여객의 사업권을 회수하라

전북 신성여객 버스 노동자 고(故) 진기승 열사가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을 맨 지 70여 일, 운명하신 지 40여 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시신은 차가운 냉동고에 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열사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1달 반 동안 무기한 승무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7월 7일부터는 민주노총 소속 전북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으로 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률이 떨어졌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뿐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연대가 확대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전주시장이 중재에

나서 신성여객 노사 잠정합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전주시내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백80여억 원(2013년)이나 되는 만큼 전주시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 왔다.

잠정합의 파괴

7월 17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까지 나서서 “신성여객 사측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주시의 압박 속에 신성여객 사측은 잠정합의까지 했지만, 곧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아직 버티고 있다. 또, 진기승 열사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 19명에

게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다.

사측이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데는 전북 지역 버스회사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일상적으로 조합원 해고와 노동 탄압을 일삼았던 전북 지역 버스 사업주들은 신성여객 노동자들의 요구가 쟁취될 경우 그 파장이 전북 지역 버스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전주시장 김승수는 신성여객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신성여객 회장 한명자의 사업권을 회수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전북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을 할 것에 대비해, 대체 버스 투입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성여객 사측이 끝까지 버틴다면 전주시가 사업권을 회수해야

마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현재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오랜 승무 거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부분 파업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다. 파업 수위를 높인다면 신성여객 뒤에 버티고 있는 전북 지역 버스 사업주들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사측을 용서하지 말고 또 다른 억울한 해고가 없도록 뽄뽄 뭉쳐 싸워달라’는 진기승 열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부당해고와 노동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전북 지역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소은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닷속에 묻으려는 박근혜 정부

김지윤

“나는 살고 싶습니다.”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새로운 영상들을 공개했다. 세월호에 탔다 희생된 단원과 학생은 몇 번이나 살고 싶다고, 꿈이 있다고 절규했다. 영상 속 학생들은 점점 기울어지는 배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절실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데 3백 명을 어떻게 구합니까?”라던 그 학생의 말처럼 결국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지금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7월 정기국회에서 끝내 세월호 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의사자 지정, 특례입학 등을 두고 다투었다. 겉으로 보면 온갖 잡음과 갈등이 있는 듯 보이지만 여야 모두 유가족들을 배제하고 진상규명에 큰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핵심 요구

핵심 이슈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여부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제출한 ‘4·16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가족 참여를 충분히 보장한 독립적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이곳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최대 3년까지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가 배상과 보상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청와대는 국정조사에 극장 제출은 기본이고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태연하게 낯잡이나 자다가 유가족들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

다. 이런 식의 국정조사로는 이 비극의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국정조사에도 불성실로 일관했던 청와대와 정부 부처, 해군,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이 조사권만을 가진 민간기구 조사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종운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여러 조사위원회에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었다”며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구나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온갖 권력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들을 처벌하려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따로 두면 된다고 조사위원회에는 자료 요청 권한만 부여하려 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며 필사적으로 수사권 부여를 막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또한 특검에서 변호사에게 한시적으로 기소권을 주는 것에 비춰 보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즉, 이들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국가를 개조하겠다고더니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보상 문제로 쟁점을 몰고 가려 한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면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우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더니 이제 와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

상 문제는 개별 가정마다 따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유가족들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승객들을 구하는 데는 무능하고 ‘VIP’(박근혜)를 구하는 데에는 몸을 사리지 않는 여당과 청와대의 뻔뻔한 작태는 ‘국가 개조’ 운운하며 흘린 박근혜의 눈물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VIP’ 구하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도 배제한 채 사실상 새누리당과의 밀실합의만을 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소권은 끝까지 특검으로 넘기자고 주장한다. 기소권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핵심 권한인데도 말이다. 특검은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기소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검찰에게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노골적인 자본주의 정당이라는 자신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연합도 자신의 사회적 기반인 자본가 계급을 일관되게 공격할 수 없는 처지다. 또한 통치체제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해관계를 새누리당과 공유하고 있다. 비록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더라도 새정치연합도 국가 기구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니 국가 기구까지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든 것이다.

이번 참사는 이윤 경쟁 체제 하에서 자본가들과 정치 권력이 실타래처럼 얽혀 온갖 오물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 줬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 그 병폐를 낫날이 밝혀내야 한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진실들

국정조사 기관보고 12일 동안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다. 사고 시각보다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배침몰 소식을 듣고도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흩어졌다.

박근혜는 서면 보고를 받고도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기본적으로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심지어 김기춘은 대통령이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며 박근혜 감싸기에 급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이기도 한 당시 안행부 장관 강병규는 ‘골든타임’도 구조 방식도 몰랐다.

해난구조대는 출동명령을 받은 지 1시간 16분이 지나서야 헬기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해군참모총장에게 답변을 떠넘기려 했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면 오후 기관보고에는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생명 구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했다. 이들이 그토록 특별법 제정에 극렬 반대하는 이유가 훤히 보인다. 지금도 이들은 유병연에게만 책임을 묻고,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수사·처벌 대상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항의에도 사용돼야 한다

7월 24일은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이다. “무능한 정부가 저희 아이를 생매장 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데 그것도 목살시켰습니다.” 이것이 지난 1백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가슴 찢던 유가족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더는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다”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 농성에 나선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이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구나. 네가 왜 죽었는지 아빠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섰단다.”

3백5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특별법 입법 요구조차 정부·여당 인사들은 본체만체하고 있

다. 제1야당 정치인들은 본 척은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는다. 이 갑갑한 현실을 견디다 못한 단원과 생존 학생들은 안산에서 국회까지 1박 2일을 도보로 행진했다.

진실 규명 앞에 완강히 버티고 선 박근혜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직접적이고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의 구실이 중요하다.

건설과 의료 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자는 요구를 함께 내걸고 투쟁에 나서려 한다. 7~8월 예고되는 임단투 등 개별 작업장의 투쟁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이 만나도록 해야 한다. 되도록 같은 시기에 싸우고, 파업 등 노동자들의 고유의 힘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벌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일 것이다.

14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MARXISM 맑시즘 2014

8월 7일(목) ~ 10일(일)
장소 : 고려대학교 | 주최 : 노동자연대

세월호 참사와 자본주의

-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연사 :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웹사이트에서 전체 연사와 70여 개 주제를 확인하세요.

지금 참가신청 하세요!
www.marxism.or.kr
02-2271-2395 | 010-4909-2026 | marxism@marxism.or.kr

※ 참가비: 하루 19,000원 나흘 60,000원
대학생 할인가: 하루 15,000원 나흘 45,000원 / 청소년 : 이주노동자 :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하루 8,000원 나흘 25,000원
※ 단체할인 : 노동조합 지부, 지회, 분회, 동이라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 나흘 구입시 15% 할인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

화물 자회사 설립 반대한다

이정원

정부는 올해 말 화물부문을 떼어 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철도공사를 여러 자회사로 쪼개려 한다. 장차 각 부문을 사기업들에게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서 KTX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강성 노조의 경영 간섭 감소', '조직 슬림화', '아웃소싱 확대'를 다른 자회사들의 모델로 삼으려 한다.

자회사 분리를 통해 노조를 축소·약화시키면 매각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였던 공항철도는 현재 큰 반발 없이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철도 분할 민영화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위한 사전 작업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분리회계 도입, 철도 요금 인상, 외주화 확대, 직종 구조조정 등은 분할을 앞둔 사전 작업이다.

이들테면 분리회계 도입은 각 부문에서 더 세밀하게 적자 요인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각 부문별 자산과 인력을 분리하려는 사전 작업이다. 요금 인상은 당장 철도의 적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향후 사기업들을 철도 운영에 끌어들이고자 수익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공항철도 매각은 요금인상, 서비스 후퇴 등을 낳는 것은 물론, 철도공사의 분할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도 작용할

것이다. 수서 KTX에 이어 공항철도까지 '신규 사업자'가 철도 운영에 뛰어들어 정부가 원하는 '경쟁 체제'를 본격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할 민영화를 막으려면 공항철도 매각과 민영화 사전 작업들부터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물 분리

정부는 경영 적자가 가장 큰 화물부문을 자회사 분리의 첫 단계로 시행하려 한다. 화물 분리가 철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장 잘 부각해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화물 수송 적자의 주범은 기업 특혜 정책이다. 철도 화물 수송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석탄, 철강 등이고, 주요 고객은 기업들이다. 즉, 화물 적자의 상당 부분은 운송료를 낮게 책정해 발생한 것인데 2012년 원가보상률이 46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정부는 '비대한 인력', '고임금' 운운하며 화물 적자의 책임을 철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인력을 대폭 줄이고 쥐어짜 비용을 낮추려 한다. 그리고 화물 자회사로의 '전직' 강요와 정리해고 방안도 추진할 심산이다.

한편 정부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화물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다.

화물부문의 '자립 기반'을 갖춰놓고, 이를 사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객 철도 서비스 향상이나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는 뒷전으로 밀려 공공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정부는 화물 자회사 설립 후 기존 물류 사기업들에게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해 갈 것이다. 이는 물류 기업 대형화, 철도·도로·해운 등 복합운송체계 강

화로 민간 물류 기업들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가 '철도 물류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도 이런 계획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철도 화물 수송도 돈 되는 상품으로 만들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려 한다. 이를 위해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노동자들은 공격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화물 자회사 설립은 철도 공공 서비스 후퇴와 연결돼 있다.

철도 화물 자회사 설립을 저지해 분할 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철도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 수는 없다” 7월 12일 전국 운수조합원 결의대회.

김민기 기자

대규모 해고와 ‘정상화’ 공격에 맞서 파업을 확고히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정원

철도공사가 대량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계획했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7월 9일 50명 해고를 포함해 1백90여 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공사는 '경영 정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37개 역을 통째로 혹은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다. 또, 수송원 업무,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외주화는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뿐 아니라 업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가로막아 심각한 안전 위협을 불러온다.

최근 철도공사는 신규 직원들에게 '연봉제 시행'과 '근속승진을 하지 않는다'는 자필 서명을 입사 조건으로 강요했다. 그리고 이를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철도공사의 전방위적 공격에 맞서 철도노조가 7~8월 총력 투쟁과 파업을 결정한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특히 조만간 철도공사는 다시 징계, 강제전출 등으로 협박하며 '정상화' 단협 개약에 합의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심지어 추가 중징계설도 흘러고 있다.

따라서 지금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한다. 그래야 해고된 조합원들을 복직시킬 가능성이 생기고 추가 징계도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징계 최소화와 후생복지를 맞바꾸는 교섭이 결렬돼 해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는 듯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사측은 후생복지를 공격하는 단협 일부를 개악하는 수준으로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 강제전출 전면 시행을 통해 '경영권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노사관계 재편을 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영화를 추진해 나갈 동력을 얻으려 한다. 올해가 분할 민영화가 본격으로 시작되는 해이니만큼 정부와 사측은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란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이런 근시안적인 맞바꾸기 교섭은 우리 편의 사기를 저하시켜, 투쟁을 통해 해고 조합원들을 복직시킬 가능성을 한층 저하시킬 공산이 크다.

효과적인 투쟁

앞으로도 노조가 부분적으로 양보한다고 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상황

이 아니다. 또, 단지 파업 위협만으로 사측이 물러설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8월 중순 파업을 압박용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실제 위력적인 파업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철도노조 위원장이 7월 19일 전국의 조합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파업 돌입 일시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또, 철도노조 중앙 지도부는 맞바꾸기 교섭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투지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철도노조 중앙 지도부는 지난해 파업 이후 사측의

계속된 공격에 맞선 정면 대응을 회피하며 거듭 후퇴해 왔고, 이것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왔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측의 공격을 저지하려면 투쟁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측의 공격이 다 벌어진 뒤에 이를 되돌리려 하면 불리한 조건에서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사측은 최근 교섭 결렬 이후 며칠 만에 신속하게 역 외주화, 역·열차 강제전출을 강행했는데, 사실 이는 충분

히 예상된 일이었다. 사측은 이미 계획을 제시했는데 세부 실행 시기가 공표되면 싸운다는 식으로 대처하면 시간을 까먹고 기회를 잃기 십상이다.

따라서 8월 중순 파업을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강제전출과 구조조정, 징계에 맞서 싸워나가고, 공격이 시작되면 파업 일정을 당겨 싸울 각오도 해야 한다.

또, 사측의 공격을 실제 저지하려면 이번 파업을 하루 파업이나 필공 파업으로 제한하지 말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연대를 확대해 광범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지금 철도 내부 상황만 보면, 사측의 탄압과 공격이 거세서 과연 맞서 싸운다고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위축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정치 상황을 보면 박근혜는 취임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가 다시 첨예한 정치 사안으로

떠올랐다. 7~8월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런 때 철도노조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지상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요구들, 즉 민영화 반대, 외주화 반대, 안전 인력 확보 등의 요구들을 내세우고 싸워야 한다. 그러면 광범한 지지를 받

을 수 있다. 이런 지지 속에서 철도 노동자들도 지난해 파업 때처럼 투지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식의 생각에 자신의 사업장 사안에만 협소하게 대처하려 할수록 철도 내에서도 직종별, 지부별 다른 처지가 부각돼 단결과 연대보다 파편화가 심해질 수 있다.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장호중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등 대책위를 만들고 각종 홍보 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 1월 시작한 의료 민영화 반대 1백만 서명 운동에 지금까지 60만 명이 참

가했다.

그 결과 지금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리병원 대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꼼수를 썼지만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68.6퍼센트가 반대했다.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추진하는 데는 74.1퍼센트가 반대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실명으로 반대 의견을 단 사람이 3만 6천여 명이나 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으로 의견서를 보낸

사람도 3만여 명이다.

의료 민영화는 병원비 폭등, 안전 파괴 등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병원이 이윤 추구에 매달릴수록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한다. 이는 환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 인력이 줄어들수록 환자 사망률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보다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파업 참가자와 기간 모두 1차 파업보다 늘 예정이다.(22일과 23일 양일간)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완전히 정당한 투쟁이다.



6월 28일 민주노총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징성이 큰 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

10개 국립대병원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구실을 한다. 이는 사립대병원과 민간 병원 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점에서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헬스커넥트'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싸워 온 것은 의의가 크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이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의료법인들에게도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의료연대본부가 헬스커넥트의 문제

점들을 폭로하며 그 정당성이 크게 약화됐다. 의료연대본부는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형식적으로는 서울대병원 자회사이지만 SK의 지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리 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결국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법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총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데, 이는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박근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 기능을 줄이고 그만큼 인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원자력의학원 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관련 기사: '한국원자력의학원 인력감축, 외주화 시도 — 공공의료 파괴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철회하라', <노동자 연대> 126호)

국립중앙의료원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진료 기능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격도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을 표적 삼아 노동자들의 퇴직수당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부산대병원 지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8월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시

도에 이어 이번에는 속초의료원이 정리하고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개조해 사용하려 한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말이다. 이는 주민투표 운동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에 대못질을 하려는 것이다.

한편 사립대병원들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들은 앞다퉈 자회사를 설립하며 돈벌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식당 업무를 외주화하려고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마저 민영화에 나서다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

고은이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기존 정관을 일부 변경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를 받고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동의'는 통신사나 보험사 '약관'과 마찬가지로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헬스커넥트는 2011년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해서 만든 영리 자회사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등을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 자회사에 '전자의료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서울대병원' 브랜드의 20년간 독점 사용 권리를 판매했다.

홍보 영상을 보면 서울대병원의 전문 의료인이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서울대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헬스커넥트도 이런 효과를 내려고 '서울대병원' 브랜드 독점 사용을 요구했을 것이다.

헬스커넥트

현재 이철희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헬스커넥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이사와 감사로 일하면서 헬스커넥트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이런 사업들은 모두 의료법을 어기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명시돼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헬스커넥트 사례를 두고 서울대학교 병원도 의료법인에 준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놔다. 학교법인들이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얘기다.

최근 SK텔레콤은 헬스커넥트가 발행한 전환사채 60억 원어치를 전량 구입했다. 지금은 서울대병원이 최대 주주이지만 SK텔레콤이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헬스커넥트의 최대 주주가 된다. 그리 되면 SK텔레콤은 헬스커넥트를 통해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서울대병원이 출자한 1백억 원과 경영 실적 등을 고리로 삼아서 말이다.

영리 자회사 헬스커넥트, 부대 사업 확대를 위한 첨단외래센터 건립 추진 등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노조가 문제 삼자,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 멈출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멈추면 쓰러진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멈춰 쓰러져야,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위험을 경계한다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5년 동안 1조 원의 운영 예산을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에서 고용할 1천4백 20명 중 15~20퍼센트를 서울대병원과 국내에서 선발해 보낼 예정이다. 가뜰이나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백 명을 보낸다면 노동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선발하는 인력은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이를 보면 5년 동안 빈 2백 개 일자리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채울 공산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다 –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노동자들의 후보 김득중이 많이 득표 하기를 바란다

7·30 재보선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 참패하길 바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 부패 인사 참극, 교통 전가 정책 등을 겪으며 분노는 더 커져만 왔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 심판론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진 않다. 정치적 대안이 시원찮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인공호흡기’라는 비아냥을 듣는 신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김한길과 안철수가 격한 항의를 받은 것은 시사적이다.

한국 사회의 지배자들 사이에서 퍼져 가는 경제·안보 위기감 때문에 엘리트 집단 내 자유주의자들도 윤신의 폭이 넓지 않다. 새정치연

합이 ‘2중대’ 구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경기 평택을의 새정치연합 후보는 정장선이다. 자유민주연합 출신인 그는 2009년에 쌍용차에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기업주 편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살인 진압도 수수방관했다.

진보정치세력들은 상호 불신과 분열이 부른 존재감 약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도 개혁주의자들의 전망에 제약을 가한다. 물론 진보 세력에 불리한 선거법 등 제도적으로 여러 불리한 요인들도 있다.

노동계급 대중의 압력이, 완화된 수준으로나마 공식 정치 안으로 전달될 매개체가 더 부실해진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이 공식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의 원인이다.

대중투쟁이 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성취 수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거를 투쟁의 대의를 정치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반기 쌍용차 8백 명 신규 채용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고민 끝에 ‘노동자 살리는 정치’를 위한 도전을 직접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평택을 재보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목적일 것이다.

스스로 진보 진영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김득중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김득중 후보가 말한다

노동자 후보로 출마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쌍용차를 포함한 KT, 현대중공업 등에서 자살과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은 정부가 6·4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살아났어요.

세월호의 죽음과 쌍용차의 죽음, 그리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타살의 문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정치 현실에 대항해 펼쳐 일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쌍용차 투쟁과 선거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쌍용차 해고자이고 지부장이므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서 따로 쌍용차 얘기를 하진 않고 있어요. 저에 대한 지지 자체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 유권자들의 희망이니까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 탄압받고 쫓겨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현실이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정리해고·명예퇴직으로 떠나는 사람이 한 해 87만 명, 계약 해지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7만 명, 폐업과 도산의 경우가 20만 명. 그렇게 한 해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2백만 명이 넘어요. IMF 당시 1백만 명의 두 배입니다. 정리해고가 일반화된 거죠.

지역구 의원들은 미군기지 문제부터 국제도시니, LG, 삼성 단지에 대한 개발 등 각각의 개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자들, 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경쟁 상대 중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후보는 쌍용차 해결에 미온적인 당사자였는데?

2009년 당시에 정장선 후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쌍용차가 독자생존을 할 수 있고, 신차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퇴직금을 담보로 1천억 원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관할하는] 지식경제위 위원장이고 [평택] 지역구 의원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어야 했어요.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정리해고를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박근혜가 계속 기세등등하고 선거에서 더 [크게] 심판받아야 하는 여당이 살아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뭔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야당입니다. 국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같이 있어야 해요. 전선을 치고 싸워야죠.

그런데 지식 많은 유가족들이 끼니를 굶고 전국을 돌며 특별법 서명과 도보

행진을 해야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보진영 분열이 선거 도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200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 열성 당원이었어요. 현장을 다니면 조합원 반응도 바로바로 나왔어요. 우리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죠.

지금은 분열과 갈등으로 안 좋은 점만 보여 주고 있어요. 최근 지역의 노조 작업장들을 많이 방문하는데, 새누리당 후보들이 현장을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민주당 후보조차 현장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평택에서 반목과 갈등을 하나로 모아내는 실험 무대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워요. 정말 더 무겁습니다.

주요 공약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5대 공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은, ‘2백만 명이 넘는 정리해고 시대 종식’이에요. 정리해고법 개정과 비정규직 고용 요건 강화를 하자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윤보다 노동자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살인법, 먹튀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범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요. 세월호 특별법도요.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평택은 미군기지가 있죠. 다른 후보들은 미군기지 개발과 위성도시 확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군기지가 없는 안전과 평화의 도시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도농복합도시라 농민 살리는 쌀 수입 개방 반대와 관세화 저지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평택은 여전히 고교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고교평준화를 이뤄야 해요.

평택을 넘어 각계각층에서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평택에 재정과 조직,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연고자들을 최대한 조직하기로 했구요.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4백여 명이 모여 모두가 힘을 받았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찾아와 힘을 모아 주시고 선거운동에 함께해 주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싸워 왔는데, 그런 힘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봅니다.

쌍용차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해고 문제에서 선봉장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출마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쌍용차 투쟁을 지지했던 모든 분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인터뷰·정리 유병규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 선 김득중 후보 김득중 선본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기업의 책임을 늘리라고 주장한다.

끈질긴 투쟁으로 지지와 연대를 확보한 쌍용차 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부당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영웅적인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의 혹독한 살인 진압에 맞서 버텼지만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불발 등으로 힘에 부쳐 역을하게 패배했다.

이후 6년 동안 노동자와 가족 스물다섯 명이 해고의 고통으로 목숨

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서울 대한문과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싸움을 끈질기게 이어 왔다.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반대의 상징이 됐다. 사회적 연대도 폭넓게 형성됐다.

그 결과, 정리해고를 위한 회계 조작도 일부 밝혀졌고, 2심에선 부당 해고라는 판결도 받아 냈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선거 도전에 지역 진보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모두 공감하며 ‘진보 단일 후보’가 된 것이다. ‘SKYM(쌍용·강정·용산·밀양) 투쟁을 함께했던 단체들도 지지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 정혜신 와락센터 소장 등 진보적 명사들도 공개 지지했다.

계급 투표 조직하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김득중 후보를 전략 후보로 정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훌륭한 일이다.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는 현장 활동가들이 세액공제, 유세 참가, 공장 안 홍보 등도 하기로 했다.

김득중 선본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을 정리해고 폐지, 기업살인법 제정 등으로 노동계급 공통의 요구로 일반화해서 제기하고 있다.

“평택시민(44만 명) 가운데 18만 명은 쌍용차, 만도, 한라공조 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한겨레21〉)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노동자도 2천4백여 명이 산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3~6퍼센트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내일의 더 큰 투쟁을 위해 오는 ‘계급 투표’라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낙오되는 사람 없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했음에도 굳건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희망연대노조의 이시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장(사진 왼쪽)과 김영수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씨앤엠 비정규직] 지부장(사진 오른쪽)을 만났다.

이시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장

“우리의 요구는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산업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지붕이나 지하 맨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주나 주택 난관에 매달려 일하기도 하고요. 사고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고, 다쳐도 산재 처리가 거의 안 돼요. 지하에서 혼자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지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 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들을 세세히 담고 있지 않

잖아요. 결국 비용이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받는 게 월급밖에 없어요. 명절비, 휴가비도 없어요. 지난해 파업으로 복지기금을 따냈고 그것으로 적지만 명절비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원청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원청이 나서서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원청인 티브로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잖아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원청

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해요.

처음에는 서로 몰랐지만 지난해 노조를 만들고 38일간 함께 파업하면서 우리 모두 형, 동생이 됐어요.

올해도 파업이 길어지고 있지만 낙오되는 사람 없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걱정되지만 모금도 호소하고 채권 발행도 고민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주는 것이 큰 힘입니다. 지난해 파업 이후에도 다른 작업장에 많이 연대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조합원들은 올해도 파업 끝나면 더 많이 연대하자고 말해요.

인터뷰·정리 조명지



MARXISM
마시즘
2014

· 패널토론 비정규직 운동의 쟁점과 과제
· 패널토론 잠재력을 보여 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자세한 정보는 3면을 참고하세요.

김영수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씨앤엠 비정규직] 지부장

“협력업체 대표들이 임금 20퍼센트 삭감을 요구했어요. 지난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 투쟁으로 평균 임금 13퍼센트가량을 올렸는데, 이전보다도 더 후퇴시키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협력업체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원청이 안정적으로 통상급여를 내놓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고용 보장도 중요해요. 이번에 협력업체 두 곳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원청에 밀려서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요.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모두 해고됐죠. 지난해 원청과 ‘협력업체 변경시 고용승계한다’는 합의를 했는데 이걸 파기한 거예요.

해고, 직장폐쇄 등 사측이 노조를 강경하게 탄압하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매각 단가를 올리려는 겁니다.

씨앤엠의 대주주인 MBK와 맥쿼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높아요. 2008년 MBK와 맥쿼리가 씨앤엠을 인수할 때 AS·개통·철거·설치 업무를 통으로 아웃소싱했어요. 당시는

노조도 없고, 우리도 무지해서 “지금보다 대우해 줄게” 하는 회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후로 점점 노동조건이 나빠졌고 임금도 동결됐죠.

그 사이 저들은 자기 배만 불러 왔어요. MBK와 맥쿼리가 씨앤엠을 인수할 때 미래에셋과 같이 자기들이 주주인 회사에서 돈을 빌렸어요. 매년 이자로 나가는 돈만 1천억 원인데, 이 돈이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또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주주 배당금으로 챙겨 가요. 약속했던 투자는

없었죠.

사실 노숙 투쟁 힘들죠. 노조를 만들지도 얼마 안 됐고 지난해 파업도 짧게 해서 경험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조합원들의 결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서로 토론도 많이 해요.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고 하잖아요. 하루하루 갈수록 조합원들이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정규직도 노숙에 참가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는 정규직이 ‘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난해 노조를 같이 만들

고 같이 싸우니까 서로 이해하게 됐고, 배려하게 됐죠.

지금 싸움은 케이블·통신 업계 전체의 싸움이에요. 판이 커졌죠. 또, 지난해 우리를 시작으로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 LG와 SK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됐잖아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들 매우 열악한 처지에 내몰려 있고, 절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우리가 거둔 성과를 보고 자신감을 얻기도 했을 거예요.

인터뷰·정리 성지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출범 1년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1년 전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출범을 알렸다. 삼성의 탄압을 뚫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삼성의 추악한 실체가 낱알이 드러났다.

매년 수조 원의 이윤을 거둬들이는 삼성전자는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을 형편없이 취급해 왔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익만 노려온 것이다.

또,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건당 수수료를 강요해 노동자들은 비수기에는 저임금에, 성수기에는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았다.

삼성에는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악랄한 탄압을 퍼부었다. 노동자 두 명이 탄압에 항거해 자결했다.

그러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불굴의 용기로 투쟁을 지속했다.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은 더 확대됐다.

그리고 올해 5~6월 노동자들은 41일 간의 전면 파업과 삼성본관 앞 농성 끝에 값진 성과를 얻었다. 건당 수수료 체계에서 고정급이 생겼고, 각종 수당과 실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파열구를 낸 삼성 노동자들.

지급도 명시됐다. 노동조합 활동하면 해고된다는 본보기를 보이려고 폐업했던 센터의 노동자들도 고용 승계를 약속 받았다. 무엇보다 단협을 체결해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파열구를 낸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일각에서는 간접고용의 확대가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노동3권도 인정받기 어려워 조직하고 투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노동법이 매우 협소하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들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과장됐다.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서비스나 A/S도 더 중요해졌다. 일년에도 수십 개의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고, 제품 수리도 점점 더 복잡해진

다. 이 때문에 기업주들도 이 분야의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위장도급

삼성전자서비스의 하청업체들은 명목상만 독립적인 삼성전자의 제품만 수리한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삼성 관리자 출신이고, 원청이 직접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노동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지 않은 것은 기업주들도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는 끊임없이 위장도급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삼성처럼 외주·도급 등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 온 수많은 다른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크게 고무했다. SK와 LG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삼성에서도 노조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며 투쟁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승리한 다음 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승리를 보며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은 삼성에 맞

선 더 광범한 투쟁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삼성에 맞선 상설연대체도 건설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에 맞선 저항이 가능하고, 삼성이 결코 무적이 아님을 입증했다. 또한 삼성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삼성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세력이라는 점도 보여 줬다.

파업 농성을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은 현재 센터별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노동자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센터별 단협 체결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어 놓고 싶겠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빼앗긴 것들까지 되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곳곳에서 조합원이 확대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사측은 이후에도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엿보겠지만 지난 1년간 투쟁 속에서 성장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은 이후 투쟁에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조명지

박태주 교수에 대한 비판

‘기업 경쟁력’이 고용을 보장하는가?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가 ‘현대차 노사관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발행한 책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노사관계 변화 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 고임금은 불가능하다”며 “고용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주고받는 ‘노사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용자와 손 잡고 생산성을 높일 때,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정리해고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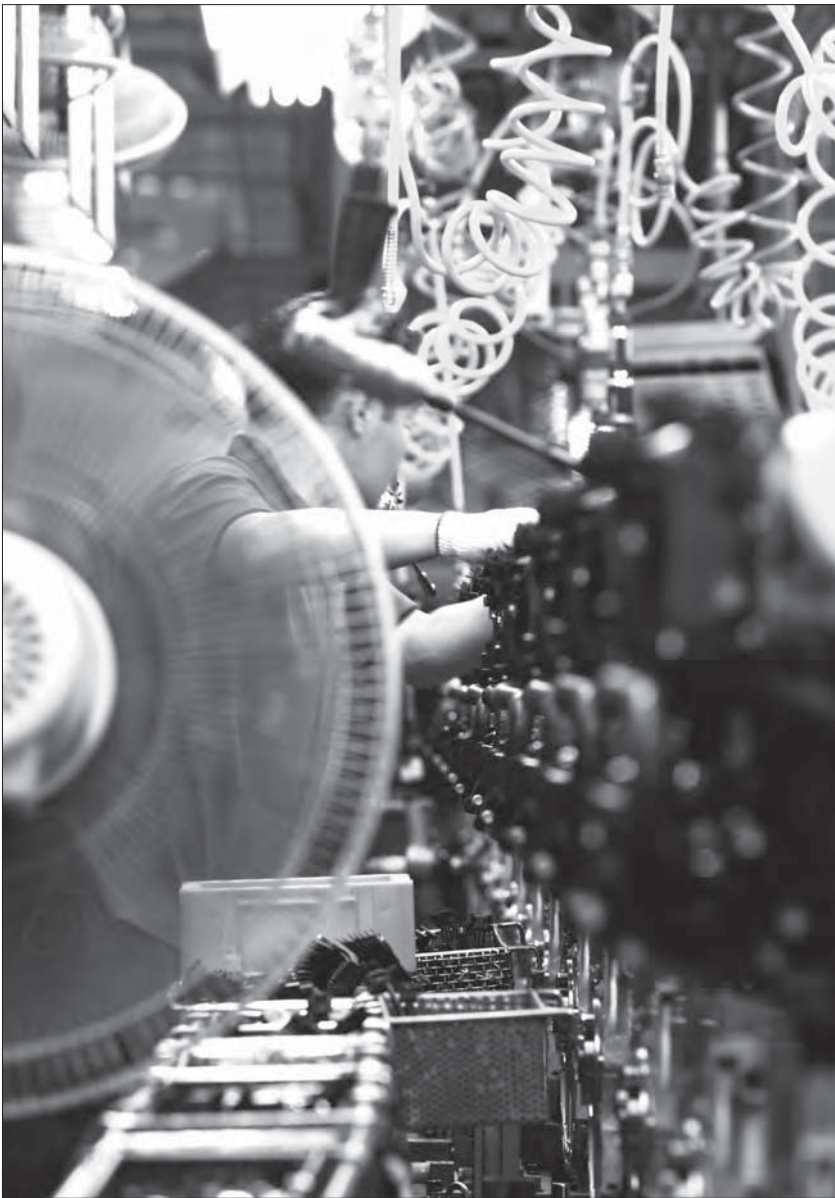
이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 유지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온건 개혁주의의 발로다. 게다가 기업 경쟁력이라는 비전을 추구하다 보면, 노동조건도 고용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파산하고 공장을 폐쇄한 것은 노동자들이 일을 덜 해서도, 생산성이 낮아서도 아니다. 미친 듯이 이윤을 위해 질주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쟁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만약 박태주 교수가 제시하듯 현대차 노동자들이 노동유연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정몽구는 지난해 생긴 약간의 수익성 하락을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거둬들인 양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현대차와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몽구는 또 수익률 하락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그 대가를 떠넘기려 할 것이다.

폭스바겐 모델

박태주 교수가 노사 타협의 대표적 모델로 제시한 폭스바겐이 바로 이런 사례다. 폭스바겐 사측은 1990년대 초



세계적 시장 경쟁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강요 받는 노동자들.

부터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끌어내 왔다. 노조는 1993년에 고용을 지키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이래로 거둬들임금·근무체제 개악 등에 합의했다.

게다가 이런 ‘내적 유연성’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고용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2006년에는 본사 직원 1만 3천 명을 조기 퇴직시켰고, 2008년에는 1만6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멕시코 공장 등 해외 공장에서도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

따라서 끊임없는 시장 경쟁에 노동자들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 사이에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고용을 위협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는 것, 이런 투쟁을 국제적으로 함께 벌이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박태주 교수가 제시하는 ‘경쟁력 강화’는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그가 3교대제 도입을 말한 것은 그 대표적 사

례다. 이는 현행 ‘8+9 시간 근무제’를 ‘8+8+8시간 근무제’로 바뀔, 개별 노동시간은 줄이되 밤샘 근무 담당조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심야노동이 되살아날 것이다. 더구나 밤샘 근무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 될 개연성도 크다. 그런데도 박태주 교수가 “24시간 경제에서 야간노동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해외 공장들에서 3교대제를 도입해 생산량을 늘린 정몽구는 국내 공장에서도 실제 이를 도입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

한편, 박태주 교수가 말하는 ‘노사 간 담합 정치’도 문제가 있다. 예컨대, 그는 현대차 정규직의 고임금이 “다른 노동자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노사 간 담합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한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 혜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답은 ‘아니오’다. 실제로 정규직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2009년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하락했다.

오히려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될 때 비정규직의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다. 게다가 정규직의 임금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자극할 수 있다.

물론,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고용을 용인하고 연대 투쟁을 방기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이는 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이해관계의 반영이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관료주의에 따른 문제다. 노조 지도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때조차 이를 방기하곤 했고, 사내하청과 촉탁직 고용을 용인하는 등의 잘못된 합의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태주 교수가 이런 관료주

의 문제를 노조 간부들과 사측의 담합으로 설명한 것은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현대차 노조의 임금 인상 파업조차 노조 간부들과 사측이 담합한 결과라고 했다.

“노사 담합의 정치”

사실 현대차 파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요식 행위”라는 박 교수의 주장은 지독한 종파주의를 드러낸다. 그의 온건한 정치가 노동자 파업에 대한 냉소로 나타난 듯하다. 사측도 “무파업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박 교수의 주장과 달리, 현대차의 임금 인상은 명백한 투쟁의 성과다. 그는 파업을 하든 안 하든 임금 인상률은 제자리였다고 말하지만, 노조가 싸우지 않은 2009년에는 현대차가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도 아예 임금이 동결되기까지 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1998년에 38일간 공장 점거파업을 벌여 대량해고를 막았고, 2012년에는 3년의 무쟁의를 깨고 파업에 나서 밤샘 노동을 폐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물론, 노조 지도자들이 투쟁을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관료주의적 타협을 해 온 것은 문제다. 이 때문에 투쟁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는데도 제약이 따르곤 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기층 조합원들과는 완전히 떨어져 허공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설사 그들이 투쟁에 미온적이라 할지라도 조합원들의 열망과 투지가 강력하면 그에 반응을 할 수 있다. 이경훈 집행부하에서도 좌파 활동가들은 통상임금 확대 등의 조합원들의 열망과 투지를 최대한 끌어내 노조 지도자들이 투쟁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박설

이범 씨 주장 반박

혁신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다

법외노조 판결 후 전교조는 조퇴 투쟁,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검찰 고발,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전임자 복귀 명령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범 씨가 〈한겨레〉에 ‘이런 전교조, 저런 전교조’를 썼다. 나를 비롯해 많은 동료 교사들은 이범 씨가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구실을 무시한 점에 불쾌감을 느낀다.

이범 씨는 교육 제도와 정책에 맞선 투쟁이 ‘남 탓’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재들이 잘못했어요’ 하는 투쟁은 수업을 혁신하고 학교 현장을 바꾸는 일을 등한시하는 데 면죄부를 주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낸다고도 말한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육 구조 타파를 위한 집단적 투쟁에 힘을 낭비하지 말

고 수업 혁신을 통한 교육 개혁에 힘을 쏟으라고 충고한다. 그가 교육 물정을 알기나 한 걸까.

교육 제도와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것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특목고에 이어 자사고까지 등장하며 심화된 고교 서열화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교실 안 수업 혁신만으로 막을 수 없다. 박근혜의 교육 공격이 미치는 악영향을 막지 않고 질 높은 수업은 가망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교는 더욱 황폐해졌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동의 발달에 맞지 않아 수업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청소년들은 배움에서 탈주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투쟁은 한 명의 학생도 배

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업 혁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혁신학교가 부분적으로 낸 성과와 잠재력을 더 밀고 나가 엘리트주의적 경쟁 교육 제도 전체를 바꾸는 운동과 투쟁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

이범 씨는 때려야 뭉 수 없는 두 과제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켜, 학교 안에서 교사 개인의 윤리적 실천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교육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단위 학교 혁신 운동만을 교육 개혁의 방법으로 택하면 금방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령, 상급 학교로 갈수록 입시 압력으로 인해 혁신학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이범 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혁신학교의 수업 방식이 입학사정관제 같은 입시 제도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범 씨가 〈한겨레〉 칼럼에서 주목한 서길원 보평초등학교 교장은 혁신학교가 새로운 학력 개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물론 입시 경쟁을 전제로 한 암기 위주의 획일적 학력 개념은 폐기돼야 한다. 그러나 대학 입시 압력이 워낙 커 혁신학교 지지자들도 부지불식간에 획일적 학력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 용인 소재 혁신고등학교인 흥덕고 졸업생들이 대거 대학에 진학했다는 식으로 “혁신학교가 학력이 떨어진다”는 우파의 비난에 응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혁신학교도 경쟁 교육 제도 속에서 커다란 시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

라서 혁신학교 활동을 입시 철폐와 대학 평준화를 위한 운동 과제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

게다가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학생들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 행정직 공무원 확충, 학교 복지 확대, 안정적 교육 활동을 위한 정규직화 등. 이런 일이 이뤄지려면 교사들이 집단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교사들은 참교육 실천을 개인적 수준으로 한정해서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자각 속에서 전교조를 만들었다.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투쟁할 때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이 진보 교육감과 법외노조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도 전교조의 전망이 돼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급진좌파의 성장과 모순, 혁명가들이 가져야 할 덕목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WP)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자본주의 체제와 유럽 급진좌파의 현 상태에 관한 글을 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기고했다. 그 글을 차승일 기자가 요약해 소개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8월 7~10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맑시즘2014 강연을 위해 방한한다.

현재 상황은 역설적이다. 자본이 약하지만 급진좌파는 훨씬 더 약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자본은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강하다. 체제에 대한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확신이 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신뢰할 만한 반자본주의적 대안이 약해서이다.

2008~09년 대불황 이후 경제의 회복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자본이 경제적

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지배계급의 일부도 경제가 “1백 년에 한번 올 부진”에 빠질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경제 위기가 대중의 급진화나 혁명을 자동으로 낳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지금은 반자본주의 좌파가 대안적관점을 내놓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급진좌파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 15년 급진좌파의 궤적

1989~91년 스탈린 체제들이 몰락하며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다. 그러나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WTO 회담을 봉쇄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애틀 전투’라고도 불린 이 운동은 이른바 대안 세계화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9·11 사태와 조지 W 부시 정부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는 저항이 경제 문제에서 정치 문제로 확장되도록 자극했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반전운동으로 이어졌다. 2003년 2월 15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해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대규모 운동이 일어났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의 시기에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단결 정서가 광범했다. 그래서 정치적 차이를 경시하거나 스리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중요한 논쟁도 있었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관계, 정당과 운동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과는 독립적이었지만 상호작용하면서 좌파 정당들의 새 결집체들이 나타났다. 이 결집체들은 사회자유주의(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부류의 사회민주주의)를 거부했다. 이 결집체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왼쪽에서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것을 보여 주는 듯했다. 그 예로는 이탈리아의 리폰다치오네 코무니스타(재건공산당), 독일의 디링케(좌파당), 그리스의 시리자,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스코틀랜드의 사회당, 덴마크의 적록동맹, 영국의 리스펙트 등이 있었다.

급진좌파는 부르주아 정치에 파열구를 내기 시작했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프랑스의 극좌파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이하 LCR)과 사회당 좌파가 2005년 5월 유럽헌법 반대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집권했다.

그러나 2005년 5월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급진좌파들은 분열하거나(2006년 스코틀랜드 사회당, 2007년 영국 리스

펙트), 선거에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2011년 포르투갈 좌파블록).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이탈리아 재건공산당).

이처럼, 2008~09년의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급진좌파들은 혼란을 겪었다. 급진좌파의 약화는 경제 위기 와중에도 계속됐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사태 전개가 조금 달랐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정치 결집체가 비교적 늦게 결성됐다. 2008년 사회당에서 분열해 나온 사람들이 좌파당을 결성했다. 2009년 초 LCR은 반자본주의신당(이하 NPA)를 결성했다. 이 두 정당은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NPA는 선거에서 좌파당과 그 동맹인 좌파전선(공산당이 주도한다)에 뒤지면서 2011~12년에 고통스러운 내부 위기를 겪었다. 그 결과 2012년 7월 LCR 출신의 걸출한 활동가도 많이 포함된 수백 명이 NPA에서 이탈해 좌파전선으로 갔다. 그들은 좌파전선 안에서 ‘반자본주의 좌파’를 결성했다.

한편, SWP는 적어도 네 번의 분열을 겪었다. 2010년 리스펙트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분열, 2011년 주로 글래스고의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분열, 2012~13년 서로 관련 있는 두 번의 분열, 2012~13년의 분열로 7백여 명이 탈당해 세 개의 극좌파 조직을 결성했다.

이에 더해 옛 시절의 악습(예를 들어 스탈린주의)도 급진좌파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듯하다. 9·11 사태 이후 영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전운동의 성장에 주도적 구실을 했던 영국 전쟁저지연합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2000년대 후반 반전운동이 쇠퇴한 뒤로 영국 전쟁저지연합 안에서 스탈린주의의 정치가 득세했다. 예를 들어, 전쟁저지연합의 주도적 활동가들은 서방의 시리아 개입을 반대하면서도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우크라이나 위기 때는 나토와 유럽연합을 비난하면서도, 크림반도를 장악한 러시아는 비판하지 않는 진영 논리에 빠졌다.



조영아 기자

정치가 중요하다

위기에 빠진 것은 정당이지 운동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아랍 혁명, 아랍 혁명에 고무돼 새로 시작된 저항 물결이 있다. 스페인의 5월 15일 운동,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이 그것이다. 2010년 영국 학생들의 폭발적 운동, 2013년 브라질과 터키의 대중 시위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운동들을 자본을 전복하는 동시에 옛 좌파의 허를 찌르는 집중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투쟁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와 정당이 사회의 근본적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사례는 이집트 혁명이다. 이집트에서는 한 정당(무

슬림형제단)의 오류, 다른 정당들(자유주의, 스탈린주의, 좌파 민족주의)의 배신이 군부의 반혁명 공세에 문을 열어 줬다. 2013년 터키에서도 게지 공원 점거 시위는 공원 자체는 구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총리 에르도안에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이 정치적 의제를 크게 바꿨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해, 새로운 형태의 좌파 정치가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는 실재한다기보다는 외관적이다. 그리스 노동계급의 강력한 저항으로 시리자가 그리스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예외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총선의 큰 성공 이후 2년 동안 시리자는 확실히 중도로 옮겨갔다. 스스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정당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시리자 내 좌파는 주변화됐다.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중도우파이자 긴축론자인 장클로드 융커를 치프라스가 지지한 것은 시리자의 우경화를 아주 잘 보여 준다. 좌파 개혁주의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다.

유럽 전역에서 경제 위기와 긴축이 낳은 환멸은 주로 우익 포퓰리즘과 파시즘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스의

▶ 10면으로 이어짐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사진 출처: Mafra/Korea (출처: Mafra)

주요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의 일반적 위기’ 상태는 아니다

‘반정치’ 담론은 현실을 원래보다 더 낙관적으로 본다. 그람시가 말한 “국가의 일반적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 말이다.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배계급 헤게모니의 위기는 지배 계급이 주요 정치적 과업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대중의 동의가 빠져나가서, 또는 많은 대중이 정치적 수동성 상태로부터 확실한 활동 상태로 갑자기 나아가서 ... 생긴다. ‘권위의 위기’가 표출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헤게모니의 위기이고, 국가의 일반적 위기이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당장의 상황은 유동적이 되고 위험해진다. 폭력적 해법, 잘 알지 못하던 세력들, ‘운명의 카리스마적 인간’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활동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현 상태를 “국가의 일반적 위기”로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늘날의 상황은 모든 주요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이 거둬거둬 수동적 상태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항의성 투표가 간간히 끼어들고, 이따금 폭발적으로 대중 운동이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그런 운동이 지속되지는 못했다.

주류 정당들에 대한 지지 하락은 두 가지 과정이 낳은 결과다. 하나는 장기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단기적인 것이다.

개인주의

장기적인 것은 파편화와 개인주의화로 나아가는 경향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대중 조직들의 기반이 약화된다. 그 대중 조직에는 정당뿐 아니라 주류 교회 같은 기관도 포함된다. 이런 경향은 전후 장기 호황기에도 있었다. 당시에는 대중이 “풍족”해서 “무관심” 병에 걸렸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개인주의화 경향이 비교적 약했다. 토니 클리프는 당시에 이렇게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거나 닫히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관심은 반대의 것으로, 즉 급격한 대중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대중적 노동자 투쟁이 분출한 것이 그런 결과였다.

단기적인 것은 신자유주의가 파편화와 개인주의적 경향을 강화하고 노동계급 조직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대중적 노동자 투쟁의 분출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 방식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부르주아 정치도 바꾸었다. 주류 정당들이 모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선거 정치에서는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와 경제 위기가 가하는 물질적 영향이 결합되

면서 “정치적 계급”(주류 정치인들을 표현하는 말)이 유권자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

‘정치적 계급’이 시민들과 구조적으로 단절되고 부유한 세계로 통합되면서 모든 정당에 대한 대중의 거부 정서가 강해졌다. 이 정서는 “모두 몰려나라”는 구호로 집약된다. 이 구호는 2001~02년 아르헨티나 항쟁에서 나온 구호다. 모든 정당에 대한 거부 정서는 ‘반정치’라고 부를 만한데, 이것은 경제 위기, 긴축, 부패 추문 같은 요소 탓에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서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대체로 ‘반정치’를 자처하지 않는다. 대신 ‘아웃사이더’를 자처한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그들 특유의 계획을 내놓고 그걸 둘러싸고 주도권을 잡아 부르주아 정치를 재편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 낮은 수준의 계급투쟁

왜 우익 포퓰리즘이 경제 위기 속에서 주류 정치와 대중의 괴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위기의 초임에 급진좌파들이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시리자라는 예외가 있다. 그러나 시리자가 크게 성공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리스의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난 덕분이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시리자의 집권을 기다리면서 계급투쟁 수위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고 있다.

사실, 그리스는 다른 곳에서 빠진 요소를 잘 보여 준다. 바로 지난 15년 동안 반자본주의적 급진화 물결이 있었지만 노동계급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분출하는 것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좌파가 전진한 시기는 1860년대와 1880년대, 제1차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둘러싼 시기, 1930년대, 1967~76년이다. 그때는 하나같이 노동운동이 눈에 띄게 전진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시기에는 이 연결고리가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중요한 투

MARXISM
맑시즘
2014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방한 강연

• 《자본론》해독

• 오늘날 제국주의를 이해하기

• 오늘날 국제 계급투쟁

※ 자세한 정보는 3면을 참고하세요.

쟁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프랑스의 대규모 파업, 2011년 영국 공공부문 파업, 2012년 미국 시카고 교사 파업은 모두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 계급투쟁이 지속

적으로, 충분한 규모로 일어나는 곳은 없다. 그동안 노동운동이 겪은 패배를 역전시킬 만큼 공세적으로 투쟁이 일어나는 곳도 없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현재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쟁점

(1) 급진좌파의 취약성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 1: 오늘날 경제적 계급투쟁은 왜 수세적이고 분산적인가?

이것에 대해 세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사회를 심대하게 바꿔서 집단적 행동 가능성이 크게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세계적 합리성”으로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합시켜 세계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경제뿐 아니라 사회관계의 모든 측면을 경쟁 논리에 종속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 주장은 옳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사람들을 위로부터 개조해 모두 똑같이 만들었고 그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는 점에서는 중요한 결함이 있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기업인처럼 바뀌었다면 어떻게 저항이 계속 일어나고 급진화가 실제로 지속될 수 있었는가? 그람시가 주장했듯이, 연대와 집단행동의 토대는 여전히 강력하다. 그람시는 대중이 생산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과거 노동운동의 유산을 공유하므로 연대하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신자유주의 하에서 경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능력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셋째,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노조 관료들을 강화시킨 배신과 패배의 사이클을 강조하는 설명이다.

계급투쟁이 강력했던 마지막 시기와 지금의 시간적 격차를 보면 둘째 설명과 셋째 설명을 조합하면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될 듯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구성이 바뀌는 것(예를 들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이주 노동자가 계속 유입되는 것)은 착취에 맞서는 저항과 차별에 맞서는 저항을 융합시켜 새로운 급진화의 자극을 줄 수도 있다.

(2) 급진좌파의 취약성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 2: 정치조직, 특히 레닌주의 조직은 끝났는가?

‘반정치’ 현상은 정당이 더는 쓸모 없는 것이 됐음을 뜻하는가? 특히 레닌주의 정당은 이제 끝났는가? 내가 레닌주의 정당이 끝났다는 주장에 부정적으로 답하자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좌파에서는 레닌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매우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그렇다. 대표 사례가 라르스 리의 기념비적 저술이다. 리는 레닌의 1902년 작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음모적이고 엘리트적인 조직을 만들라고 주장했다는 신화를 교정하려 했다. 리는 레닌이 독일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독특한 정당을 만들려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리의 노력은 레닌을 전체주의의 화신으로 그리려는 부르주아적 관점을 교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레이를 리처럼 이해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이번 호에서 폴 블랙러지가



노동계급의 운동에 개입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려는 레닌주의 조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1914년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다뤘다. 다음 호에서 케빈 코어와 개렛 젠킨스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시리자는 성공하고 NPA와 SWP는 위기를 겪는 지금 시기에 “광범한 정당”에 대한 급진좌파의 환상은 매우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리의 저술은 독립적인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조직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그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말이다.) 물론 볼셰비키와 최근의 극좌파들이 정당을 건설하려 한 노력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운동이 맞닥뜨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답을 운동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급진좌파의 취약성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 3: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부활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부활은 국제적 현상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의 부활은 더 넓은 반자본주의적 급진화의 일부라는 점을 꼭 봐야 한다. 페미니즘이 다시 떠오르는 맥락에는 세 가지가 관련 있어 보인다. 첫째, 급진화 자체의 제한성이다. 즉, 급진화가 수동적 성격을 띠고 노동계급의 저항이 충분한 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매우 여성차별적인데, 1960~70년대의 여성 해방 운동이 가져온 한 가지 효과로 정당이 끝났다는 주장에 부정적으로 답하자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좌파에서는 레닌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매우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그렇다. 대표 사례가 라르스 리의 기념비적 저술이다. 리는 레닌의 1902년 작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음모적이고 엘리트적인 조직을 만들라고 주장했다는 신화를 교정하려 했다. 리는 레닌이 독일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독특한 정당을 만들려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1960~70년대에 발전한 이론적으로 다양한 버전의 페미니즘이 인문·사회과학계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권 대학에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버전의 페미니즘은 포스트식민주의와 퀴어 이론과 만났다. 한편 주디스 버틀러와 낸시 프레이저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새롭게 이론적 변형을 발전시켰다.

이런 사상들은 특히 학생들과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이 청년들은 현재의 급진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

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내놓은 팽풍·힘들우기 약속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언론이 말하는 것과 여성·피차별자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해방을 가져올 능력이 있는 강력한 세력은 없는 듯하다. 그들에게 조직 좌파의 정치적 인식과 조직 방식은 흔히 너무 낡았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정치에 접근할 때 도덕적 비판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도덕적 비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계속해서 물질적·정신적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분석·전략과 만나지 않는다면 도덕적 비판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결국 도덕적 비판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많은 것을 공유하는 담론이 되거나 위선적 담론이 되기 십상이다. 최근 급진적 진영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론적 개념들의 일부, 특히 특권 이론과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은 피차별자 일부를 매도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상호교차성’은 착취와 차별의 여러 형태가 서로 융합되는 현실을 묘사하는 개념으로는 유용하다. 그러나 ‘상호교차성’은 내가 거의 20년 전에 정체성 정치의 저항이 충분한 힘을 제공하지 못한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것의 한계는 개인 체함을 물신화하는 극단적 주관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개인 체험이 압도하면 비판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새롭게 급진화하는 세대가 자기들이 쉽게 접하는 이론에 이끌리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이론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애틀 이후 일어난 급진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체제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와 여성 차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난 1960~70년대에 벌어진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사이의 논쟁에 유용한 정보가 많다.

1980년대에 전반적으로 우경화가 일어나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무너졌다. 이 상황 덕분에, 여성

▶ 12면으로 이어짐

▶ 11면에서 이어짐

차별을 논의하는 데서 급진 페미니즘과 여러 버전의 포스트모더니즘, 나중에는 포스트식민주의가 특세하게 됐고, 여기서 계급과 여성 차별의 관계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

현 상황에서 여성 차별에 맞선 저항과 자본주의 비판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매력을 줄 수 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1970년대의 논쟁 동안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통합시키려 했던 노력의 산물이었다. 핵심 인물은 하이디 하트먼이다.

최근 미국 마르크스주의자인 새런 스미스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되살리려 하면서 노동계급 남성이 여성 차별에서 득을 보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골장 나아갔다. 스미스는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발전시킨 여성 차별 이론을 공격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했다. 스미스는 IST가 ‘환원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IST의 이론은]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는 계급투쟁만으로도 여성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된다.”

스미스의 주장은 중상모략이다. SWP가 낙태권 옹호 운동에서 한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완전한 어불성설임을 알 것이다. 우리는 여성 차별의 기원과 극복 방안을 놓고 페미니스트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 해방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눈앞의 문제에 맞서 싸

워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페미니스트들과 생각이 같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라 IST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 피해자가 노동자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핵심적 일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럼에도 IST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부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스미스의 말은 꽤나 옳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일어난 논쟁에서 린지 저먼과 크리스 하먼은 스미스 등이 되살리려고 하는 많은 가정들에 이의 제기를 했다. 즉, 저먼과 하먼은 가부장제 이론을 허물어뜨렸다. 그 이론이 공상적이고 초역사적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그랬다.

스미스는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은 모든 것을 계급 문제로 환원시켜 여성 차별의 현실에 사실상 눈감는다”고 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하먼은 바로 이런 비난에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는 여성 차별 문제를 계급 문제로 ‘환원’하지 않는다. 모든 계급의 여성이 차별받는다. 어떤 사회에서 소수 인종이 계급과 상관없이 차별받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지만 계급 사회의 근저에 있는 그 차별의 근원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그 차별을 없애지 못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계급 사회에 반대하는 투쟁과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투쟁,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형태의 착취와 차별의 원인에



자본주의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해방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반대하는 하나의 투쟁이 있을 뿐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 차별을 낳는 물질적 결정 요인들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현재 임금노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

다.(선진 경제에서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 가운데 거의 50퍼센트가 여성이다.) 이런 경향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내에서 주도적 구실을 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착취와 차별의 체제 전체를 물어 버릴 수 있는 노동계급 내에서 말이다.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은 노동운동이 이런 획기적인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지금 시기에는 ‘혁명적 인내심’이 필요하다

급진좌파가 현재 겪는 어려움을 균형 감각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비판의 정당함을 확인해 줬다. 토마 파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마르크스에 대한 칭찬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가 이데올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명한 소설가인 어느 마르크스주의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르크스주의적 사상과 문화가 정말로 부흥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30살 이하의 많은 사람들의 충성을 박탈당했다는 것이 심중팔구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 자본

주의가 남반구로 확장되며 노동계급이 국제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화가 더 촉진됐다.

문제는 방대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운동의 기존 구조가 파괴되고, 위기가 급습하고, 자본가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의 급진좌파 위기는 이런 배경에 비춰 이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막 시작한 약 35년 전 크리스 하먼은 두고두고 볼 만한 분석을 《인터내셔널 소설리즘》에 기고했다. 그 논문은 당시 유럽의 혁명

적 좌파들이 겪고 있던 위기에 관해 쓴 것이다. 당시 혁명적 좌파들이 겪은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집중적이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위대한 노동자 투쟁 속에서 떠오른 중요한 극좌파 조직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와해됐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는 당시보다 훨씬 더 분산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하다. 지금의 혁명적 좌파가 당시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SWP나 NPA 같은 조직을 분열시키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하먼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앞에서 언

급한 논문의 결론을 썼다.

“혁명적 인내심은 오늘날 꼭 필요한 덕목이다. 혁명적 인내심은 말로는 ‘전환기’를 얘기하지만, 실천에서는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 체제의 위기를 처리할 수 있을 때야 뭔가를 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개혁주의적 땀질로 이끌리는 것의 유일한 대안이다. 혁명적 인내심은 수명이 짧은 ‘새 운동’을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혁명적 인내심을 종파적 수동성과 혼동하면 안 된다. 혁명적 인내심은, 투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포착해, 조직을 시험하고 최상의 새 활동가들을 가입시키고, 노동계급 내에서 조직의 영향력을 키워서, 필수불가결한 정당으로 천천히 나아간다는 뜻이다.”

다니엘 벤사이드도 자서전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느린 조바심”을 말했다. ‘느린 조바심’은 “활동적인 기다림, 긴박한 인내심, 참을성, 끈기로서, 기적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것은 세력 균형이 우리 편에 유리해졌을 때 혁명가들이 역사를 만드는 좋은 위치에 서 있게 되기 위해, 현재에 개입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려는 단호하고 완강한 노력이다.

가자 지구 공격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가

김종환

7월 8일부터 이스라엘은 5분당 한 번 꼴로 가자 지구에 미사일을 퍼부었고 지상군까지 투입했다. 이미 3백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는 지상군 투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민 3명이 살해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구실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정착민들의 생사가 확인되기 전부터 이미 미사일까지 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였다.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쏘는 로켓에 대한 자위권이라는 말도 거짓이다. 몇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제국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도망치듯 철군하고 이스라엘의 숙적 이란이 부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하마스가 포함된 팔레스타인 통합 자치정부 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피를 제물 삼아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듯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굴복시키거나 제거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피해자의 80퍼센트는 민간인 대등한 '교전'이 아니라 일방적 학살이다.

계속 이어지는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지난 9일 기자회견에 이어 7월 17일에도 이스라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노동자연대, 팔레스타인해방연대,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약 40개 단체에서 1백50여 명이 참여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유학 온 청년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번 위기의 원인이 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점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14년에도 이 지구상에 점령당한 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2백여 명의 공습 사망자를 기리기 위해 모이셨지만, 지난 1백 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이 당한 수난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되찾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야 합니다. 점령이 끝나지 않는 한, 매년, 매 반년마다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은 무엇에서 비롯했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결코 수천 년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아랍 수도에서 유대인들은 무슬림이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살았다.

오늘날 분쟁은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은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원래 살던 땅에서 쫓아내고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데서 시작됐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에서 독립하며 생긴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국주의에 기대서 생긴 국가이다.

이스라엘 건국 운동인 시온주의의 창시자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들은 처음으로 식민지 확장의 필요성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는 식민주의 사상인 시온주의를 영국인들

이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수에즈 운하, 석유 등으로 중동 지역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영국·미국은 그런 계획을 기꺼이 활용했다. 그래서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만들면서 시온주의 정착민들에게 땅의 55퍼센트를 할애했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을 통째로 원했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자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세웠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며 영토를 확장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원하는 것은 빼앗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를 폭력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다.

이스라엘 반대는 유대인 배척인가?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만의 인종차별적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이고, 이스라엘이 그 결과물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대인 혐오가 확산될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은 원래 시온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았다. 예컨대, 러시아 혁명의 한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를 포함해 많은 유대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대안으로 택했다. 1920년대 영국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다 죽은 이라크인들 중 상당수도 유대인들이었다.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 학살)를 자행하자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 국가만이 유대인을 구원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유대인

들을 끌어들었다. 정작 시온주의자들은 나치에 동조했으면서 말이다!

시온주의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과거 히틀러의 유대인 증오 따위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가자 지구 공습 반대 시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참가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미국의 돈과 무기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구현하는 데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것이 유대인 배척이 아닌 까닭이다.

제국주의는 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가?

19세기 말~20세기 초 세계 최강대국이던 영국에게는 수에즈 운하가 중요했다. 그러나 아랍 지역에서는 점차 반식민주의 투쟁이 자라고 있었다. 영국은 시온주의 국가가 “적대적 아랍주의의 바다에 떠 있는 충성스러운 작은 유대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봤다.

1951년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나중에 유명해진 글에서 이스라엘과 서방 제국주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다. “이스라엘은 경비견이 돼야 한다. 아랍 국가가 미국과 영국의 희망을 거스른다면 이스라엘은 그런 아랍 국가에 대한 공세 정책을 도맡게 될 것이다.”

영국의 뒤를 이어 패권 국가가 된 미국도 같은 전략을 채택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시리아·요르단의 군대를 제압해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했다. 당시 베트남에서 골치를 앓고 있던 미국은 이스라엘을 앞세우면 중동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친미 왕정이 타도되자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에게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으며 유지됐다. 최근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개발에도 미국 정부의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을 탄압하는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 제국주의가 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중동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지키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각국의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주류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이스라엘의 피해만 부각시키는 까닭이다.

미국이 ‘중재’했다는 ‘평화 프로세스는 전혀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그 결과로 들어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을 대신해 팔레스타인인들을 탄압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장악력은 더 커졌고, 평

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환멸은 더 커졌다.

팔레스타인 주변 아랍 국가들도 이런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 아랍 지배자들은 제국주의 질서에 도전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

그러나 지배자들과 달리 아랍 민중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무관심했던 적이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대규모로 투쟁한 인티파다(반란이라는 뜻)는 언제나 아랍 각국에서 투쟁을 자극했다. 아랍 지배자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혁명이라는 바이러스를 퍼

뜨리는 보균자”로 여기고 꺼리는 까닭이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은 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 줬다.

대표적 친미 독재자 무바라크를 쓰러뜨린 이집트 민중은 타흐리르 광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도 흔들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이 수천 명은 이스라엘 대사관에 쳐들어가 각종 비밀 문건을 폭로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는 지배자들의 위선적인 협상이나 중재가 아니라, 아랍 혁명처럼 중동 지역의 제국주의 질서 자체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필요하다.

추천 소책자/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노동자연대, 149쪽, 4,500원

인티파다 —
시온주의, 미국과 팔레스타인 저항
필 마셜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352쪽, 13,000원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강동훈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2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췄다.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4월 세월호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미 2월에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매출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민간소비 증가 둔화가 단지 세월호 참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참사로 더 큰 영향을 받았을 서비스업 생산은 오히려 4월보다 늘었고, 광공업 생산이 2.7퍼센트 감소했다.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은 국내 투자가 부족한 것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10대 그룹의 금융회사를 제외한 81개 상장사의 올 1분기 말 사내유보

금은 5백15조 9천억 원으로, 2009년의 2백71조 원에 견줘 90퍼센트나 급증했다(‘CEO스코어’ 조사). 10대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1백조 원에 이른다. 반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8.9퍼센트로, 1분기(29.3퍼센트)보다 0.4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내수 부족

기업 소득이 늘었고 실질금리가 사실상 ‘제로(0)’인데도 기업들은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을 쌓기만 할 뿐, 투자를 단념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 부족은 수입이 제자리 걸음인 무역의 현황에도 나타난다. 올 5월 수입이 지난해보다 0.3퍼센트 줄면서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월 경상수지 흑자는 3백15억 달러나 된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8백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처럼 늘어나는 무역흑자는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낳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는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불안한 중국 경제와 대중국 수출 감소

이처럼 민간소비와 투자는 줄고 수출만 느는 상황이 2014년에도 반복되고 있지만, 이조차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6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 10.1퍼센트 늘어난 것에 견주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2008~09년에는 대중국 수출에 의존해 심각한 위기를 피한 바 있지만, 앞으로는 이조차 쉽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한국 지배자들이 한중FTA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대중국 수출을 조금이라도 늘려 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중국 경제 자체도 불안하다. 1분기 수출은 3.4퍼센트 줄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7.4퍼센트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7퍼센트는 물론 연간 성장률 목표치 7.5퍼센트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중국은 과잉투자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제조업 거품, 지방정부 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거품,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권 불안정 등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다.

대기업 유동성(자금) 양극화 심화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재벌들은 엄청난 자금을 쌓으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부그룹의 부도 위기에서 보듯, 재벌 중에도 수익 감소로 위협에 처한 곳들도 늘고 있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부실 우려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재벌인 한진,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성,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백67.4퍼센트로 1년 전보다 19.9퍼센트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현대그룹은 부채비율이 5백40퍼센트, 한진그룹은 4백52퍼센트에 달해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현대와 한진은 최근 계열사와 자산을 매각하며 자금을 확보하러 나섰지만, 여전히 각각 6천억~1조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997년에도 중견 대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금융권에 타격을 가한 것이 IMF 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상태가 양호했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 두 그룹은 국내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가 넘는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분의 1이나 감소했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아차는 20퍼센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 등 의료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삼성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삼성은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의료기 사업을 꼽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과 규제완화 정책도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10월에 양적완화를 끝내겠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로 돈 풀기에 나선 일본도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고,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아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BES)가 지급불능에 빠지고, 불가리아 4위 은행인 코퍼티 커머셜 뱅크가 파산한 것은 유럽의 금융·재정 위기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 커지고, 한국 대기업들의 상황도 나빠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임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한국 경제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보여 왔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우려하면서 조만간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추가경

정예산(추경)은 편성하지 않는 대신 올 하반기에 국민주택기금이나 산업은행·기업은행,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추경에 버금가도록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LTV, DTI* 규제도 완화해, 빚을 더 내어 집을 사도록 만들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로 했다.

‘줄푸세’

박근혜 정부는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도 인하하려 한다. 금리 인하는 자금을 공급하고 원화 강세를 완화해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조치이다.

최경환은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를 만든 자이다. 아니다 다들까, 최경환은 법인세 인상이 오히려 경기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를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도 했다. 과표 구간 축소는 일부 재벌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반면, 대표적인 간접세로 서민 부담이 큰 담뱃세는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부채 축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이미 1천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빚을 더 늘리고 거품을 키워,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선부른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정책은 조만간 시작될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과 충돌하면서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원화 약세)을 낳아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최경환은 한국 경제 자체의 내수를 늘려야 한다며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배당,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등에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느 정도 했다”고 말하고, “기업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같은 정책에 강한 열의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경환은 “최저임금의 너무 급격한 인상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게다가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유재산 몰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게 부담을 줄 정책은 쉽게 채택하지 못할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데, 특히 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등은 기업의 수익성을 낮춰, 오히려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과 규제완화 정책도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낼 공산이 크다.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임금 억제 등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말이다.

노동자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때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싸울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가 40퍼센트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예를 들어, 주택의 담보평가 금액이 1억 원이고 LTV가 60퍼센트일 경우, 6천만 원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진보적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임금 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보수적 국제기구들도 제기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한다. 경제부총리 최경환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일부 반영한 정책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말잔치로만 끝났던 경제민주화론의 후속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말이다.

신자유주의가 경제 성장도, 공평한 분배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독자들은 임금을 올려 노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소득을 올린다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물론 소득 주도 성장론에는 합리적 핵심이 일부 담겨 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개입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늘리려 했던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긴 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매우 미약했다. 1937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또다시 “역사상 최악의 경기후퇴”를 맞아야 했다.

역사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그



자본주의에서 분배는 늘 불공평하지만, 경제 위기가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대중의 소비 부족을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중의 소비보다는 자본가들의 투자다.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계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고, 공장, 쇼핑몰, 사무실 등을 건설하며 생산적인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 투자가 충분히 크다면 임금이나 소득의 정체 또는 감소는 경기후퇴를 낳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경제 통계를 보면, 기업들의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33년 ~2008년 민간 비주택용 고정투자 수

요가 GDP보다 거의 네 배, 개인 소비보다 거의 다섯 배 빠르게 성장했다. … [같은 기간] 소득 중 투자의 몫은 거의 네 배 증가했던 반면, 소비 몫은 16퍼센트 하락했다.”(앤드류 클라이언,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한울.)

‘과잉생산자’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노동자들은 생산된 상품 전체를 구입할 수 없다. 사장들은 노동자들을 일 시켜 기계와 건물의 소모 비용, 원료비와 임금을 보존할 뿐 아니라 이윤도 반드시 얻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매출액 대비 임금 비율이 2013년에 1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음번 투자를 위한 적립금과 이윤을 사용할 지 말지는 전적으로 자본가들이 결정

한다.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노동자는 언제나 ‘과잉생산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공평한 분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언제나 있어 왔다. 경제 위기는 분배 문제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에서 비롯한다. 이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시기에는 투자가 줄면서 고용,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게 될 공간이 크다.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요구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와 자본가가 ‘원-원’ 할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결국 딜레마에 부딪치게 된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 현실에서 실패로 드러나면 또 다른 경제 성장론으로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실제로, 서구의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1970년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 주도의 소비 확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신자유주의로 돌아섰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소비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윤을 놓고 경쟁하는 생산 체제라는 자본주의의 본질 때문이다.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단념하지 않고 전개하는 것과 함께,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는 근본적 사회 변혁을 위한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정선영

전후 장기호황이 소득 주도 성장 덕분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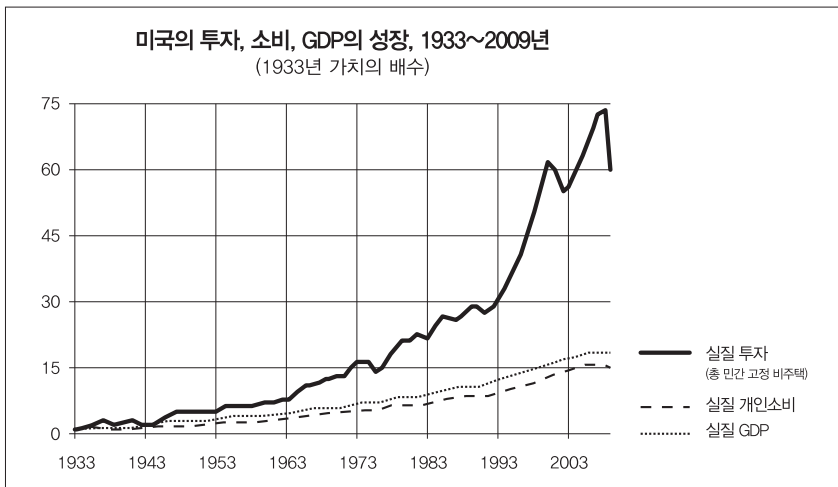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출비 자본주의) 번역자(공역)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소득(임금을 포함한)을 늘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소득(또는 임금) 주도 성장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기업의 총수익이 고정적이라면 임금 증가는 이윤을 감소시키겠지만, 노동자들이 임금 증가분만큼 소비하므로 기업 매출이 늘어난다. 이것이 가속도 효과를 내면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윤 감소분보다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반대로,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총수요 감소를 낳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즉 자본축적)을 저하시켰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론은 유효수요 부족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파소소비론의 변형판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개인소비, GDP보다 더 빨리 늘어나며,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 주도 성장론 주장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호황이 정부의 재정적자와 복지 지출 덕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호황 기간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했던 주된 목적은 호황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제2차세계대전 때 치솟은 미국의 국가부채는 1950~60년대에 꾸준히 감소했다.

서유럽의 장기호황을 분석했던 한 마르크스주의자는 “케인스주의가 서유럽의 장기 호황에는 거의 아무 구실도 하지 못했으며, 미국에서는 제한적 구실만 했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장기호황기에 실질임금이 오르고 사실상 완전고용이 이뤄졌다. 이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가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지출을 늘렸다. 특히 모든 선진국에서 장기호황기 동안 교육비 지출이 늘었고, 그 외에도 노령연금이나 실업급여가 제공됐다.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생산성을 국제 수준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을 육성하고 보호하기도 해야 했다.

군비 지출

하지만 이런 ‘노동비용의 사회화’는 개별 자본가들에게는 비용을 증대시키는 부담이었다. 호황기에는 이런 비용이 자본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호황의 동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복지 비용은 자본가들에게 성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부담이 됐다.

이 때문에 국가와 자본가들은 성장률이 낮아진 시대에(1970년대 말 이후) 임금과 복지를 억제하는 데 혈안이 됐던 것이다.

요컨대, 장기호황 때 완전고용과 복지 확대는 높은 성장의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다.

전후 장기호황의 주된 동력은 미국

의 군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었다. 군사비라는 낭비적 지출은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생산적 부문에서의 투자 증대를 억제함으로써, 고용된 노동력 대비 투자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냉전과 함께 군비 지출이 급증해 1950~53년에는 GNP의 13퍼센트가 됐고, 1950년대와 1960년대 내내 6~7퍼센트를 유지했다. 이런 높은 수준의 군비 지출 때문에 미국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군비 지출이 낮았던 유럽에 비해 훨씬 낮았다.

소득(특히 임금) 주도 성장론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보는 논리다. 자본축적이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 노동소득이 증대되는 것(필연적이지는 않지만)이지, 노동 소득이 증대해 자본축적이 활성화 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축적)을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은 이윤율이지 임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축적률이 독립변수이고 임금률은 종속 변수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빅토르 세르주는 어떻게 러시아 혁명의 불길을 존속시켰는가

빅토르 세르주(아래 사진)는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저술가이자 혁명가다. 조지 페이지스가 세르주의 삶을 돌아본다. **조지 페이지스**는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의 오랜 당원이고 UCL대학교(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프랑스학부 부교수다. 《마르셀 마르티네: 혁명의 시인》, 《사랑과 소설》 등을 썼고,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의 영어판 공동 번역자이기도 하다. 다른 공역자 피터 세지워드도 SWP 당원이다.

빅토르 세르주는 혁명적 ана키스트였다. 그는 1919년에 러시아로 가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했다. 세르주는 20세기 전반기의 혁명적 경험들을 담은 많은 글과 책과 소설을 썼다.

세르주는 1890년 벨기에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러시아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벨기에로 망명 온 집안이었고 매우 가난했다. 그의 부모는 민중주의 테러리스트 운동단체인 나로드나야 볼라(민중의 의지)에 공감했다.

세르주는 이렇게 썼다. “인생의 의미는 오직 역사를 만드는 활동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고 나는 배웠다. 역사를 만드는 활동이란 인간을 굴종케 하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인간을 해방시키고 성장시키는 투쟁에 모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세르주는 가족이 겪었던 빈곤에서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 그의 동생 라울은 9살에 영양실조로 죽었다.

세르주는 벨기에 사회당의 청년 조직에 가입했다. 그러나 벨기에 국가가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공식 병합하는 것을 벨기에 사회당이 지지한 1908년에 세르주는 벨기에 사회당을 탈당했다.

벨기에 사회당의 보수성에 넌더리가 난 세르주는 제1차세계대전 개전 전 벨기에에서 노동계급 운동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주요 조류였던 ана키즘에 끌렸다.

아나키스트들은 주류 사회를 거부했다. 그들은 출세하거나 의회 정치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세르주는 비타협적인 ‘개인주의적’ ана키스트들에게 끌렸다. 그 ана키스트들은 절도 같은 불법 행동을 주로 활용했다.

세르주는 ‘개인주의자’들의 신문 《아나키》의 편집자가 됐다. 비록 나중에 그들의 행동을 집단 자살 시도라며 비판하게 되지만 말이다. 그래도 세르주는 경찰에 체포됐을 때 ‘개인주의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권위

1917년에 출소한 세르주는 스페인으로 갔다. 러시아 2월 혁명에 고무된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ана키스트들이 이 봉기를 이끌었다. ана키스트들은 권위를 모두 거부했으므로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 덕에 지배계급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마침내 봉기를 짓밟았다.

세르주는 내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1919년 1월 혁명 러시아에 도착했다. 다섯 달 뒤 그는 볼셰비키당에 가입했다. 세르주는 볼셰비키당이 혁명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 왔음을 알았다. 볼셰비키는 혁명을 지키고 지배계급을 분쇄하기 위해 권력을 잡았던 것이다.

레온 트로츠키는 적군을 창설해 백군에 맞서 혁명을 수호했다. 반혁명 세력은 아주 악랄한 수단까지 이용하며 옛 차르 시절의 지배계급을 복원시키려 했다.

세르주는 백군과 백군을 지원한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혁명을 지키려면 억압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세르주는 이렇게 썼다. “자신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큰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러시아 혁명을 지키는 적군(赤軍), 1919년.

숭고한 일인지를 자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했다. … 그 임무는 전체 인류와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연합인 코뮌을 위한, 인민의 연합인 인터내셔널을 위한, 여성 해방을 위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우리 계급 자신의 끊임없고 철저한 정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은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혔다.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의 혁명을 맨 처음 시작하는 영광을 유럽에서 가장 낙후한 나라가 누리게 됐다는 사실은 지독한 불행이다.”

이중의 의무

적색 테러*가 증가했다. 공산당 관료들의 권력이 커졌다. 그들의 부패와 특권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런 현실을 보며 세르주는 혁명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 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사회주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반동적 요소에 맞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살아남으려면] 옛 정권의 무기를 들어야 하지만, 그 무기는 양날의 검이다. …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할 때는 비판, 반론, 시민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1920년 쯤에는 이것들이 이미 한참 모자란 상황이었다.”

혁명가들은 내전에서 승리했지만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혁명이 생존하려면 선진국들로 혁명이 확산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산업이 크게 발전한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은 1918년에 제1차세계대전을 끝냈다. 그 뒤로도 혁명은 계속됐다. 세르주는 독일로 갔다. 1923년 10월 말에 봉기가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불발이었다.

독일 공산당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원래는 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해 결성됐다)은 노동계급에게 봉기를 위한 정치적 준비를 시키지 않았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하는 노동자들은 봉기를 일으키자는 호소에 수동적인 반응을 보였다.

봉기가 실패한 바로 그 주에 독일의 고위 장관과 장성들은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주최한 10월 혁명 기념 연회에 참석했다!

파리 틀기

세르주는 당시 상황이 크게 모순됐다고 느꼈다. 한편에서는 연속혁명이 전개되고 있었다. 연속혁

적색 테러

반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작된 일종의 제한된 공포 정책. 이후 관료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명은 혁명의 성과를 지키고 확산시킨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관료들이 어떤 사상을 키우고 있었다. 그 사상은 사회주의가 한 나라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일국사회주의론-뮌헨이)이었다.

레닌은 관료들이 위험한 세력이 됐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그 기계를 조종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그 기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핸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게 됐다.”

1925년 세르주는 러시아로 돌아왔다. 레닌은 이미 죽고 없었다. 세르주는 반대파에 합류해 트로츠키와 함께 혁명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반대파의 혁명가들은 1928년 관료들(이제는 이오시프 스탈린이 관료들을 이끈다는 것이 분명했다)에게 패배했다. 세르주는 옥고를 치르다 중앙아시아의 오렌부르크로 유배를 갔다.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936년 세르주는 유럽으로 돌아갔다. 그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거치며 트로츠키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 그들은 곧 사이가 틀어졌다. 하지만 세르주는 그 “옛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를 피해 멕시코로 갔고, 빈궁하게 살다가 죽었다.

세르주의 묘비명은 그의 시 ‘죽은 형제들의 별자리’에서 나왔다. 이 시는 투쟁 속에서 산화한 이들을 추모하는 시였다. 그러나 이 시는 미래를 내다보기도 했다. “열정 넘치는 모험이 계속된다. 그 길에 희망이 있다. 그대의 차례는 언제인가? 내 차례는 언제인가? 그 길에 희망이 있다.”

관련기사 ‘빅토르 세르주에 대한 〈한겨레〉의 부정확한 서평’이 본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에게 혁명에 함께하자고 호소하다

빅토르 세르주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의 간부가 됐지만, 계속해서 아나키즘의 장점에 호의적이었다. 1920년 세르주는 《아나키스트와 러시아 혁명의 경합》이라는 소책자를 써 아나키즘을 혁신하자고 호소했다.

그 소책자에서 세르주는 이렇게 말했다. 아나키즘이 “자기 머릿속에만 있고 공상적인 신조를 고수하거나 작은 종파로 남아 있으려 하지 말고, 노동계급과 혁명 운동을 신화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르주는 아나키즘이 혁명 운동에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한 바를 ана키스트들에게 상기시켰다. 국가에 대한 적대, 애국주의 반대, 지배계급 생산수단의 몰수 같은 것들이었다.

아나키스트들이 제2인터내셔널에 소속돼 있던 주류 노동자 정당의 무기력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던 사람들은 볼셰비키였다. 비록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는 방식으로 지배계급을 몰리치고 혁명을 완수하고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지만 말이다.

세르주는 ана키스트들에게 혁명 바깥에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 혁명을 지키고 나머지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도우라고 호소했다.

인간 동기의 역학을 밝히는 소설

세르주는 “역사 저작”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소설을 즐겨 썼다. 그는 소설이 인간의 마음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 인간 동기의 역학, 인간 내면에서 작용하는 역동성과 모순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내심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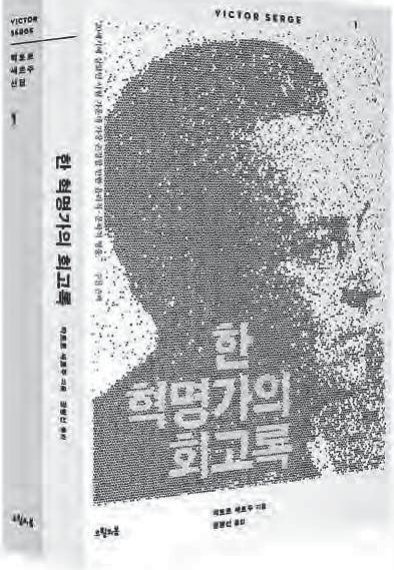
《톨라예프 사건》에서 세르주는 스탈린이 정적을 체포하고 살해할 구실로 삼았던 살인 사건을 다뤘다.

《정복당한 도시》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겨울의 페트로그라드를 그렸다. 세르주는 당시의 극심한 궁핍과 그런 궁핍 속에서도 살아 있던 사람들의 의식을 담았다.

세르주는 위나니미슴[집단은 개인을 초월한 독자적 생명과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믿은 20세기 초 일부 프랑스 시인들 중심의 문학 사조-편집자의 영향을 받았다. 위나니미슴은 주요 개인이나 가문에 초점을 맞추는 고전 부르주아 소설의 개인주의를 거부하는 급진적 문학 사조였다.

위나니미슴들은 문학의 새로운 임무는 인간의 집단적 의식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나니미슴은 공통의 역사적 힘의 영향을 받은 운동 속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사회 집단의 모습을 그렸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2호 / 번역 최병현



빅토르 세르주 저/정병선 역
오월의봄 | 2014년 07월 | 27,000원

빅토르 세르주에 대한 〈한겨레〉 이재성 기자의 부정확한 기술

〈한겨레〉 이재성 기자는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을 비평하면서 “스탈린주의자들로부터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작 세르주는 트로츠키 및 그 추종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썼다.

마치 세르주가 스탈린 VS 트로츠키 사이에서 제3의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세르주는 스탈린에 투항하지 않고 1923년 초에 트로츠키가 이끄는 좌파적 반대파에 합류했다. 그는 트로츠키와 논쟁하기도 했지만, 트로츠키를 마지막까지 존경했다.

물론 그 둘 사이에는 이견이 존재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였다. 1921년 러시아 크론시타트 수병 반란의 의미, 1930년대 스페인 혁명에서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POUM)의 중간주의(혁명적 입장과 개혁주의적 입장 사이에서 줄곧 동요함) 노선, 스탈린주의 공산당을 대체할 새로운 혁명적 국제단체인 제4인터내셔널 창설.

여기서는 이 중 특히 크론시타트 수병 반란에 대한 세르주의 태도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재성 기자가 볼셰비키의 강경 진압에 세르주가 반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틀렸다. 세르주는 볼셰비키의 크론시타트 진압에 전향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볼셰비키 정권이 타협하지 않고 크론시타트 수병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반란군을 백군 장군들이 지휘하는 ‘반혁명가들’로 비방한다며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정부와 반란군의 전투를 중재하려고 개입했다. 내전 한복판에서 집권당의 규율 있는 당원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결국 크론시타트가 더는 백군으로부터 페트로그라드를 지키는 요새가 될 수 없음이 세르주에게 분명해졌다. 그러자 그는 크론시타트 반란 진압을 지지했다.

크론시타트의 진실은 반혁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반란을 진압해야 했거나(트로츠키는 이를 두고 “비극적 필요”라고 말했다), 아니면 그 반대였다. 세르주는 이 두 세계에서 최상을 취하려다 잠시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던 것뿐이다.

김인식



3월 22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민영화, 임금·복지후생 삭감이 '정상화'의 실제 내용이다.

개각 후에도 지속될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

최미진

새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한국 경제 성장 문화가 예상되자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쓰려 한다. 그러나 재정 투입은 늘린다 해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복지에 대한 공격은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배자들에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 지출이 늘었지만, 이것은 기업 살리기용일 뿐이었다. 같은 기간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삭감, 인력 감축, 구조조정으로 고통받았고, 공기업 민영화도 호시탐탐 시도됐다.

최경환은 취임사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공공부문 공격의 추진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성과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것은 ‘정상화’의 핵심 내용, 즉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기관의 사업과 지분을 되도록 사기업에 많이 팔아넘기는 민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창조경제를 하려면 의료, 교육 분야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최경환의 소신이라는 점을 볼 때 의료 민영화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새 경제수석 안중범도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을 맡아 왔다. 새 경제팀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1라운드 성적표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 1순위로 내세운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지난 6월 공공기관 노조들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했다.

‘정상화’ 항목 타결을 노조에 압박하려고 계획에 없던 1차 중간 경영평가를 시행해 평가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상화’ 항목을 성취하지 못하면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성과급을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연봉 수백만 원이 깎이는 실질적 공격이다.

이런 정부의 압박 속에 ‘정상화’의 핵심 타깃이 된 38개 중점관리기관 노조들은 상당수가 복리후생을 부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공공기관 노조들의 반발 때문에 ‘정상화’ 공격을 원하는 만큼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가령, 정부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려고 했으나 삭감액이 워낙 커서 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박근혜는 노조와 합의해야만 해고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도 없애려 했지만, 이것도 관철하지 못했다.

또, 개별 공공기관들은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대신 다른 보상을 구두 약속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상당수 노조들이 복리후생 삭감에 일결 합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서 후퇴한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단협 개악 거부 공동대응을 하며 함께 정부를 밀어붙였다면 복리후생을 더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과급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복리후생까지 내줘야 하느냐’는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또, 사측이 ‘구두 약속’을 온전히 지키리라는 보장도 없다.

적지 않은 공공기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공기업 노동자는 철밥통’이라는 정부의 방만 공세 프레임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밀어붙인 다음 그것을 지렛대로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전가를 강요하려 한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공공서비스 후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가령, 철도 인력 감축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내뽐 강화와 자신들의 조건 방어를 연결시켜 투쟁한다면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

8월 말 9월 초 투쟁을 예고한 공공기관 노조들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뽐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다. 7월 1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 50만 명은 긴축에 반대해 파업을 했다. 이 투쟁은 영국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런 구실을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공공기관 노조들이 복리후생 삭감에 부분적으로 합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굶직한 항목

들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 정부가 가장 중요한 전장으로 보는 철도노조 등 민주노총의 주요 작업장들은 ‘정상화’ 합의를 하지 않았다. 민영화와 기능조정(통폐합) 같은 굵직굵직한 문제들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공공병원들과 지방공기업 노조들도 투쟁 중이거나 투쟁 준비 중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와 장관들의 출납마 등으로 정부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 지금 공공기관 노동자

들이 싸우기 유리한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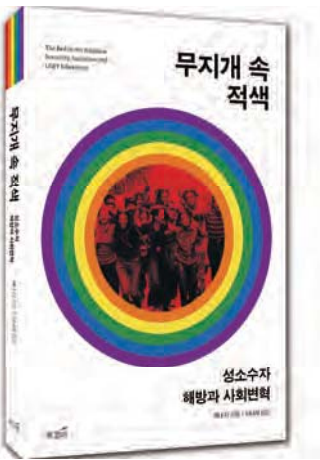
9월에 있을 2차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앞두고 8월에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이 또다시 거세질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 동맹파업과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미뤄뒀던 공격을 본격화할 수 있다.

예상되는 정부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공공기관 노조들은 9월 초로 예고한 공동파업을 최대한 규모 있게 조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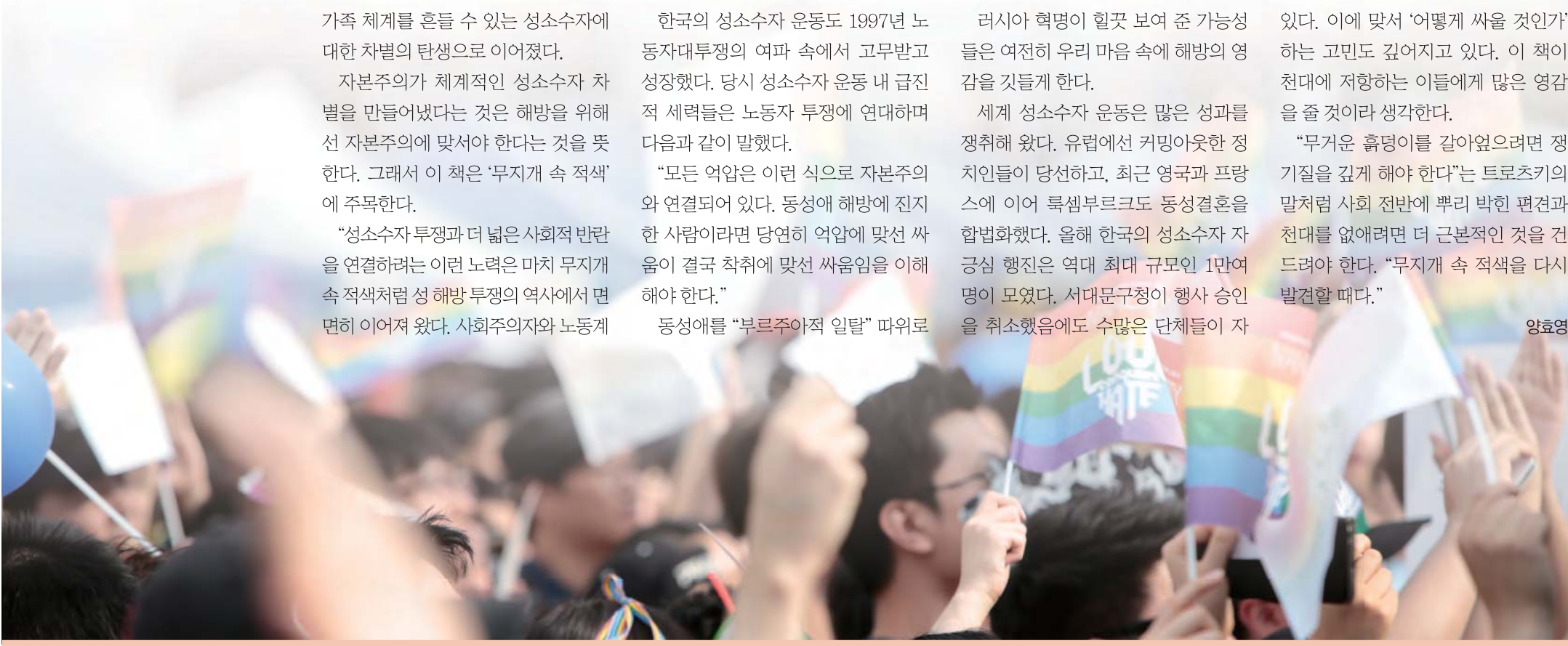
서평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체제에 맞선 급진적 성소수자 해방 운동을 위한 제언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해나 디 지움, 이나라 율김
책갈피, 256쪽, 12,000원



레프 비고츠키 : 생각을 이해하는 혁명적 방식

레프 비고츠키의 저작에서 인간 정신의 작용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존 패링턴이 살펴본다. 존 패링턴은 마르크스주의 과학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회백질과 백질 덩어리[뇌]가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마리 퀴리,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만들어 내는가?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흔히 일할 때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나 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가?

더 나아가, 거대한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즉,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가장 창조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근본적 물음들은 인간 존재의 핵심적 문제다. 그러나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요한 이유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영화 〈인셉션〉으로 유명한 배우 엘렌 페이지가 얼마 전 커밍아웃을 했다. 그는 “숨는 것에 지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지쳤다”며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냈다.

자본주의는 매일 성소수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숨어 있으라 한다. 그들은 ‘비정상’이니까.

그러나 “동성 간 사랑 욕망 관계와 젠더 다양성은 인류 자체만큼이나 오래됐다 …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나 생각하는 방식은 고작 1백 년 남짓 된 것이다.”

자본가들은 19세기부터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이성애 관계를 기본으로 한 ‘정상가족’을 재구축했다. ‘정상가족’의 탄생은, 자칫 그런 가족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가 체계적인 성소수자 차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해방을 위해선 자본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책은 ‘무지개 속 적색’에 주목한다.

“성소수자 투쟁과 더 넓은 사회적 반란을 연결하려는 이런 노력은 마치 무지개 속 적색처럼 성 해방 투쟁의 역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사회주의자와 노동계

급 운동은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성소수자들의 전투적인 반란이었던 1969년 스톤월 항쟁은 1968년 노동자 파업과 흑인 공민권 운동, 베트남전 반대 운동 등 일련의 투쟁 물결의 일부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체제에 맞선 더 큰 반란의 일부였기에 그토록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에 동성애자의 인권을 명시한 곳은 유럽의 어느 국가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 속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자신의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연결하려 노력했다.

뿌리 뽑기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도 1997년 노동자대투쟁의 여파 속에서 고무받고 성장했다. 당시 성소수자 운동 내 급진적 세력들은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억압은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동성애 해방에 진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억압에 맞선 싸움이 결국 착취에 맞선 싸움임을 이해해야 한다.”

동성애를 “부르주아적 일탈” 따위로

보는 스탈린주의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성 해방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반동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과 러시아의 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 해방 투쟁에 헌신해 왔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세계 최초의 동성애자 운동이 성장하는 데 핵심 구실을 했다.

특히 러시아 혁명은 “성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전혀 없는 진보를 가능케 한 사건”이었다. 볼셰비키는 자본주의적 착취를 폐지하며 그에 동반되는 차별과 억압도 함께 뿌리뽑으려 했다. “혁명 전에 남몰래 결혼한 두 여성은 결혼을 인정받았는데, 영국에서 ‘시민 동반자 제도’가 도입되기 88년 전이었다.”

러시아 혁명이 할꼇 보여 준 가능성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해방의 영감을 깃들게 한다.

세계 성소수자 운동은 많은 성과를 쟁취해 왔다. 유럽에선 커밍아웃한 정치인들이 당선하고, 최근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룩셈부르크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올해 한국의 성소수자 자금심 행진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이 모였다. 서대문구청이 행사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자

금심 행진을 함께 방어하고 참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폭행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2008년 영국 동성애 혐오 범죄 조사를 보면, 동성애 혐오 범죄 신고 건수의 고작 1퍼센트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과거에 뿌리를 둔 한물간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만 치르면 되는 필연적 진보의 궤도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체제는 하루하루 새롭게 우리를 억압할 뿐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것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운동이 성장하면서 우익들의 훼방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 책이 현대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무거은 흙덩이를 갈아엎으려면 정기질을 깊게 해야 한다”는 트로츠키의 말처럼 사회 전반에 뿌리 박힌 편견과 천대를 없애려면 더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 한다. “무지개 속 적색을 다시 발견할 때다.”

양효영

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안정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주춧돌 삼아 경력을 쌓는다. 그러나 나는 그런 기회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 처음부터 분명했다. 그 대신 삶은 나에게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사회, 엄청난게 고무적인 분위기를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혁명에 고무된 비고츠키도 마르크스주의 노선에 따라 심리학을 재정립하는 일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비고츠키의 이론적 토대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통찰, 즉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 환경을 조작하고 변모시킨 것이 인간의 초기 진화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비고츠키는 언어도 일종의 정신적 도구, 즉 인간의 진정한 의식이 형성되는 데 일조한 도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고츠키는 인간의 행동을,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언어가 우리 삶에서 역동적 구실을 할 뿐 아니라 언어의 구실이 우리의 실천적 경험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기 직전에 비고츠키는 인간 정신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뇌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려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정신기관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는 다양한 도구, 예컨대 신경세포의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기술이나 학습·인지 능력 평가 때 뇌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컴퓨터 단층촬영 등을 본다면 비고츠키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히 먼 듯하다. 그러려면 사회 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로운 과학자 세대, 즉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인류가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곳까지 대답하게 나아가야 태세가 돼 있는 과학자들도 필요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05호 / 번역 이수현

새로 번역·출간된 비고츠키 선집

어린이 자기행동숙달의 역사와 발달 2
레프 비고츠키 지음, 비고츠키 연구회 율김 살람터, 542쪽, 28,000원

· **패널토론 비고츠키와 인간 발달**

현보선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데이비드 엘로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자세한 정보는 3면을 참고하세요.

독자편지

8월 11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노후 장비, 안전 장비 개인 구입, 인력 부족 ...

소방공무원에게 단결권을 허용하라

2014년 소방은 격동의 중심에 서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연히 대한민국 유일한 재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 대응 업무를 통합하고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있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가안전처의 소방 본부로 편입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놔다. 여러 분야로 분산돼 있는 재난 대응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한다는 취지를 들으면 의견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실상 모든 재난 현장에서 주도적 구실을 해 온 소방방재청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버린 것이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 해체가 아니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주장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고 (특별·광역)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다. 전체 소방공무원 3만 9천5백19명 중 국가직은 3백2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공무원이다. 국가직은 현장대원보다는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을 보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은 모두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직화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구실을 하는 것은 지방소방공무원이고, 세월호 참사에서 봤듯이 결국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이들이다. 따라서 현장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지방소방조직의 변화 없이 재난컨트롤타워만 변해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소속이다 보니 소방예산의 98퍼센트를 지방정부가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마다 소방 여건이 천차만별이다. 모두가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안전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안전장비를 사비를 들여 구입해야 하고 소방장비의 노후화율이 전국 21퍼센트에 이르며, 인력이 부족해 혼자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은 58세이고, 최근 5년 동안 29명의 순직자와 1천6백26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국민의 안전은 둘째로 하고 소방관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외치는 이유다.

소방공무원들은 스스로 반문한다. 왜 이런 환경에 놓일 때까지 스스로 개선하지 못했을까?

소방공무원에게는 노조는 물론이거니와 직장협회의회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6년에 소방공무원들은 단결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을 냈는데, 법원은 “소방공무원은 법으로 두렵게 복지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단결권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세계노동기구(ILO)는 수차례 대한민국에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고 있다.

결국 소방공무원들은 궁여지책으로 소방발전협의회라는 동호회 형식의 카페를 2006년 5월에 개설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조직 발전, 국민 소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싸우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싸움은 흡사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위태롭게 화마와 싸우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희생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에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단결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내가 경험한 민영화된 미국 의료 시스템

가난하면 결코 아파서도 안 된다

썩썩한 미국인들은 유학생이던 나와 친해질 때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다른지 또 어디가 더 좋은지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곤 했는데, 덕분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부모님 댁을 방문 중이던 마리아(29)는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놀란 그녀의 엄마가 구급차를 불렀다. 다행히 큰일이 아니어서 응급실에서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은 그녀는 몇 주 후 구급차 이용 요금으로 3천 달러, 한화로 대략 3백만 원가량의 청구서를 받았다. 대학원을 졸업한 그녀의 당시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다.

미국의 구급차는 통상 5백 달러가량의 기본요금(이미 비싸다!)에 자잘한 상황 별로 추가 요금이 붙는다. 요금이 추가되는 경우는, 구급차 안에서 진행된 시술 및 응급처치의 내용, 환자이송거리, 사이이렌과 경광등을 켜는지 여부, 보호자를 동반했는지 여부 등등이 있다. 마리아의 경우, 그녀의 어머니가 동행했고 의식이 없는 사이 여러 가지 시술들이 이뤄진 것이다.

구급차 얘기 하나 더. 조단(24)은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승용차 안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도왔다. 구급차가 도착해, 운전자를 돕느라 다친 조단은 손과 팔에 묻은 유리 파편을 닦아낼 거즈를 달라고 요청했다. 구조대원은 그에게 어떤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아무 의료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던 조단은 결국 거즈 없이 가던 길을 가야 했다.

다음 내가 겪은 일은 민영화된

의료의 왕국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비쌌 뿐 아니라 느리고 불편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지난해 가을 나는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고 무서웠다. 돈도 없고 가입된 보험도 없었으니 말이다.

나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원, 한국으로 치면 보건소 같은 곳을 찾아냈다. 오후에 첫 방문을 했는데, 검진을 받으려면 그 병원에 먼저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은 아침에만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오라더라. 수업이 없는 날을 기다려 안내받은 대로 일찍 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7시에 병원문이 열리면 그전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준다더라. 난 그 번호표가 다 난간 후 병원에 갔고 그래서 또 진료받지 못했다. 그러는 와중에 내 잇몸 염증은 다 나았다. 말 그대로 내 몸의 치유능력이 미국의 서민의료 시스템보다 빨랐던 것이다.

기다림의 연속

잇몸 사건을 겪은 후, 그냥 “안 아파야지” 하며 미국에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나는 간신히 그리고 운 좋게 메디칼(Medi-Cal)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일부 빈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매우 운이 좋아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경우이다. 가난을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 제출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간신히 두어 달 만에 메디칼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쓰는 이유는 이후에 내가 겪은 경험이 미국의 노동계급 일반, 그중 의료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의 경험과 같을 거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다.

나는 기침이 심해서 3월 초에 병원에 전화했는데 그로부터 2주쯤 뒤인 3월 19일이나 의사를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병원 어떤 의사를 내주 치의로 할지 정해야 해서 그 병원이 붐비거나 내 주치의가 바쁘면 얼마가 됐든 기다려야 한다.

어쨌든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 의심된다고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고는, 그 병원 그리고 내 보험과 연결된 방사선과의 주소를 줬다. 그 병원에서 8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고려대에서 연세대쯤 되는, 전혀 가깝지 않은 곳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병원을 떠나며 또 가장 가까운 날에 예약을 잡으니 그것이 3월 29일이었고, 나는 그날부터 약을 타먹을 수 있었다.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를 보려고 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게 필요한 약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주 나는 똑같은 약을 받으러 서울의 한 보건소를 찾았다. 번호표 뽑고, 간호사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보건소 지하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2층에서 피 뽑고, 1층에서 의사와 진료하고 약까지 받는 데 48분이 걸렸다. 그리고 한 푼도 안 냈다.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공공의료료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나도 안다. 분명한 것은 미국 민중의 처절한 삶에 비춰볼 때, 의료민영화는 결코 우리가 견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점이다.

김주혁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www.wspape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영국 맑시즘2014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체제 변화의 방법을 토론하다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영국 ‘맑시즘2014’가 성황리에 끝났다. 등록자가 2천6백 명을 넘었다고 한다.

영국 ‘맑시즘2014’ 첫 날인 7월 10일은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공동 파업을 벌인 날이기도 했다. 7월 10일 저녁에 있었던 개막식은 활력이 넘쳤다. 특히 최근 다섯 달 파업으로 승리한 남아공 마리카나 광원 노동자의 연설은 참가자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영국 ‘맑시즘2014’에서는 영국의 계급투쟁, 반파시즘 투쟁, 1984~85년 광원 파업, 경제 위기와 반긴축 투쟁,

국제 노동운동,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기초 사상 등을 주제로 1백66개의 워크숍이 열렸다.

논쟁적

논쟁적인 주제도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을 바꾸었는가?’, ‘혁명은 모두 독재로 귀결되는가?’, ‘좌파 개혁주의, 국가, 오늘날의 사회주의 정치’,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는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아랍 혁명과 중동의 위기, 제1차세계대전 1백주년, 교육, 환경, 과학에 관한 주제들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달리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처음 참가했는데 흥미로웠다”며 만족해 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맑시즘2014’가 8월 7~10일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방한해 연설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 진보적 연구자·저술가들도 ‘맑시즘2014’에서 연설한다.

※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www.marxism.or.kr / 02-2271-2395



성황리에 끝난 영국 맑시즘2014 개막 집회.

